93일간의 꿈꾸는 바다 이야기

바다와 인류의 아름다운 공존을 노래하고 자연과 문명의 조화로운 상생을 기원하는
지구촌 바다축제가 대한민국 여수에서 펼쳐집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해양박람회의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주 제 | 살아있는 바다,숨쉬는 연안
기 간 | 2012년 5월 12일 ~ 8월 12일(93일간)
장 소 | 전라남도 여수 신항 일대 / 규 모 | 참가국 100여 개국

봄을 기다리는 이유

꽃이 피고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봄

봄은 우리를 꿈꾸게 하고 설레게 합니다
하지만, 2012년 봄이 더 기다려지는 건 다채로운 축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 봄, 가슴뛰는 축제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14회 함평나비대축제

기간 : 4월 27일(금) ~ 5월 8일(화) : 12일간
장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153-1번지
(함평군 함평읍 곤재로 27번지)

2012 문경전통찻사발축제

기간 : 4월 28일(토) ~ 5월 6일(일) : 9일간
장소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새재 도립공원 일대

제17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

기간 : 5월 2일(수) ~ 5월 6일(일) : 5일간
장소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악양면 일원

Vol. 7 봄호 2012

지역과발전

Regions & Development

특집

지역산업 육성정책과 일자리 창출

인터뷰
강동석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장

알기 쉬운 지역발전정책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발전방향

지역발전 국내사례
진도군 도서종합개발사업

지역발전 해외사례
일본의 청년창업 정책

지역발전과 사람
공동체박물관 계남정미소의 역할과 꿈

기고
FTA와 지자체의 대응방안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발전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지역의 시대
지역이 활짝 웃을 때까지
지역발전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지역발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설치, 지역발전5개년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163개 기초생활권, 5+2 광역경제권, 4+3 초광역개발권 등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의 대변자,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www.region.go.kr **페이스북** www.fecebook.com/happyregion.kr **트위터** twitter.com/happyregion

도시와 지역이 함께 커가는 꿈
도시및지역계획연구원이 지키겠습니다

도시및지역계획연구원(KEPSI)은 도시 및 지역발전에 관한
제반문제를 조사 · 연구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1971년 6월 30일에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주요사업

- 생활환경의 개선과 국토개발을 이룩하기 위한 제반사항의 조사 · 연구
- 각국의 도시 및 지역개발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종합적인 계획' 지식의 보급 및 정부기관에 대한 필요한 자료의 제공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 연구기관,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 도시 및 지역계획에 관한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 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기타 본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연구사업

본 연구원은 각종 연구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 상황을 분석하고 산업정책 수립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계은행 · 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현재 우리나라 도시들의 국제 경쟁력과 위치를 조망하고 있습니다.

발간사업

「지역과발전」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공무원은 물론 자치단체의회, 연구원, 학계 등을 주독자층으로 하는 전문지로서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간의 의사소통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및지역계획연구원 Korean Envirnmental Planning Studies Institute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303호 | Tel. 02)538-3692 | Fax. 02)3453-2407 | e-mail. kepsi2010@gmail.com

봄호 Vol. 07

지역과발전

Regions & Development

발행일 2012년 3월 20일 | **발행처** 지역발전위원회 | **발행인** 홍철 | **편집인** 한영주 | **편집위원회** 권원용(위원장) · 김선희 · 김현호 · 송미령 · 송우경 · 이원섭 · 오재학 · 정창무 | **편집간사** 김일현 · 김순주 | **등록번호** 12-B552531-000006-08 | **주소** 도시및지역계획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303호 | **전화** 02-538-3692 | **팩스** 02-3453-2407 | **이메일** kepsi2010@gmail.com | **디자인 · 인쇄** (주)코리아프린테크 02-2264-3325

Contents

특집 지역산업 육성정책과 일자리 창출

권두언

04 활기찬 지역경제, 국가경쟁력의 열쇠
홍석우/지식경제부 장관

특집 Ⅰ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성과와 한계

06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정책
김영수/산업연구원 연구위원

09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
정성훈/강원대학교 교수

12 지역특화산업 육성정책
김희재/스트라베이스 총괄이사

특집 Ⅱ 일자리 창출 중심의 신지역산업 발전전략

14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2단계 육성정책 방향
조현훈/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사무관

17 지역특화산업 육성정책 확대 개편
정만태/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소장

20 지역산업 육성 지원제도 개편
정종석/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

23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방안
차두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실 실장

특집 Ⅲ 광역경제권별 2단계 선도산업 육성계획

26 충청권 2단계 광역선도산업 육성전략
이근호/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선임연구원

29 호남권 2단계 광역선도산업 추진현황 및 과제
최정은/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선임연구원

31 대경권 2단계 광역선도산업 주요내용과 과제
이상준/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선임연구원

33 동남권 2단계 광역선도산업 육성전략
하창현/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책임연구원

36 강원권 2단계 광역선도산업 육성계획
민태홍/강원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선임연구원

38 제주권 2단계 광역선도산업 육성전략
최명동/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실 광역경제 담당사무관

인터뷰

40 여수세계박람회와 지역발전 : 강동석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장
인터뷰어 : 한영주/도시 및 지역계획연구원 원장

알기 쉬운 지역발전정책

46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발전방향
김수현/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사무관

49 다문화가족 지원, 미래를 대비한 가장 확실한 투자
박선옥/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행정사무관

봄호 Vol. 07

지역과발전

Regions & Development

52 중앙과 지역이 함께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장영철/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 주무관

54 도농교류협력사업
문대곤/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도농교류2팀장

지역발전 국내사례

56 진도군 도서종합개발사업
조경수/진도군청 수산지원과 담당자

58 클린하우스, 청정제주의 디딤돌!
강경엽/제주시 생활환경과 클린하우스담당

지역발전 해외사례

60 일본의 청년창업 정책
양현봉/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62 EU의 지역고용협약제도(Territorial Employment Pact)
윤윤규/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65 미국 미시간주의 고용정책
김정홍/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

지역발전과 사람

68 섬을 여행하는 새로운 방식, 섬여행학교
강신겸/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70 공동체박물관 계남정미소의 역할과 꿈
김지연/계남정미소 대표

기고

72 FTA와 지자체의 대응방안
이민수/전북발전연구원 농업농촌팀 연구위원

74 균형발전 선도지역 충북의 과제
원광희/충북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76 천혜의 행복공간 대청호 오백리길
문경원/대전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77 중국 시안(西安)의 대당서시(大唐西市) 프로젝트
송우경/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통계로 본 지역경제

78 최근의 지역경제 동향
임경은/통계청 사무관

서평

81 The Coming Jobs War
김현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실장

포토에세이

82 지역과 발전, 포토에세이

독자광장

84 독자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Special Theme

지역산업 육성정책과 일자리 창출

권 두 언

1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성과와 한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정책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

지역특화산업 육성정책

2 일자리 창출 중심의 신지역산업 발전전략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2단계 육성정책 방향

지역특화산업 육성정책 확대 개편

지역산업 육성 지원제도 개편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방안

3 광역경제권별 2단계 선도산업 육성계획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활기찬 지역경제, 국가경쟁력의 열쇠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스톡홀름시 북서쪽으로 20km 정도 벗어난 지역에 활기로 가득찬 도시가 있다. 여의도 면적의 1/4밖에 되지 않는 이곳에는 에릭슨, IBM 등 굴지의 글로벌기업을 포함한 1,100여개의 IT기업이 입주해 있다. 또한, 2만4천여명의 IT고용인력과 6천여명의 대학생, 연구원들이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인구 9백만명의 작은 나라 스웨덴을 세계적인 IT강국으로 키워낸 심장부가 바로 이곳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이다.

국경이 사라진 무한경쟁의 도전에 직면하면서 지역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핵심 주체로 부상하였다. 오늘날 지역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이명박정부는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을 도입하였고, 선도산업 육성, 인재 양성, 기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역경쟁력의 원천은 지역인재 양성' 이라는 인식 아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대응한 20여개 대학을 중심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지역 기술인력 채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지역 선도기업의 우수인력 고용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지역산업 정책이 인재양성보다는 장비, R&D센터 구축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결과 고용창출 효과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며, 지역 R&D 인력의 수도권 유출 문제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지역에서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기업에서 일하고 성장하는 선순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산업 지원체계를 '일자리 창출과 인재 확보'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기반이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간 신성장동력 중심으로 선정되었던 광역선도산업에 지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주력산업을 더하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지역 기업들이 우수한 R&D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석박사급 연구인력에 대한 채용조건부 R&D를 도입하는 등 지역 R&D와 고용간의 연계도 강화하였다. 또한, 산업단지에 대학과 기업연구소의 입주공간을 마련하여 기업과 대학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산학융합지구를 확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하여 취업을 앞둔 지역인재들에게 기업을 직접 탐방하고 스킨십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일자리의 미스매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 전통의 판소리는 고수와 소리꾼이 한 쌍이 되어 공연을 한다.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인·대학·시민들은 소리꾼, 중앙은 반주와 장단을 제공하는 고수와도 같다. 신명나는 판소리 한마당처럼 중앙과 지방이 전략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을 우수한 인재가 커가는 곳, 국내외 인재가 모이는 곳으로 변모시켜 나갔으면 한다.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성공 또한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와 함께 촉진자(facilitator)이자 든든한 지지자(supporter)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정책

김영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yskim@kiet.re.kr

추진배경과 광역경제권정책의 의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정책은 MB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사업이다. 16개 시·도를 5+2 광역경제권으로 묶은 것 자체는 그동안 국토계획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광역권을 설정하여 국토개발에 활용해 왔다는 점에서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러나 세계화 속에서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인접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지식의 창출-확산-활용 체계를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기 위해 광역시와 광역도 간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광역경제권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광역경제권의 핵심은 그동안 광역시와 광역도 간에 분절되었던 경제·산업적 연계관계를 복원하여 지식의 창출-확산-활용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과 시·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에 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시·도 단위로 추진되었던 여러 사업과 자원을 광역경제권 단위로 확대하여 기능을 특화하고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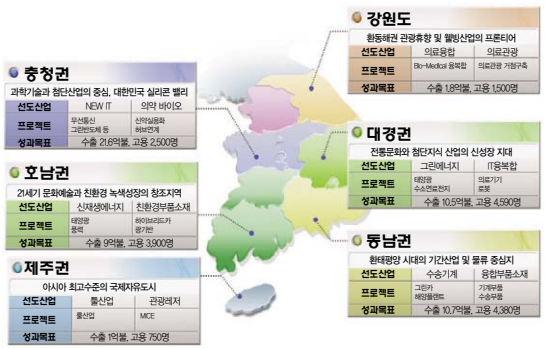
광역경제권 정책은 기존의 시·도 단위 지역정책을 보완함으로써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지역발전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광역경제권 정책은 수도권 단일의 성장엔진에서 벗어나 국가 내에 복수의 성장엔진과 발전거점을 형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성장을 도모하는 국가성장전략이기도 하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정책의 추진현황과 특징

정부는 광역경제권별로 2개씩의 선도산업을 선정하고, 선도산업별로 3년내 매출 및 고용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2개씩의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프로젝트(총 20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지원하였다. 선도산업은 주로 광역경제권의 미래 성장산업 창출차원에서 신성장동력산업 중심으로 선정되었고(〈그림〉 참조), 지원사업은 유망품목의 사업화 기술개발사업에 집중되었다.

▶ 광역선도산업 육성 1단계사업 추진현황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이하 광역선도사업)은 국비 기준으로 3년간 총 9,162억원(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포함)이 투자되었고,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인해 지역산업 지원사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예산비중이 2009년 28.5%에서 2011년에는 50.2%로 확대되었다. 반면, 1999년부터 10여년간 추진되어 온 시·도 전략산업 지원 비중은 계속 감소되고 있다.

광역선도사업의 특징은 첫째, 특화센터 조성 등 하드웨어 지원에서 탈피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유망상품의 사업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원규모를 대형화하고 매출, 수출, 고용 중심의 정량적 성과를 지향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구축된 혁신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기업이 성장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사업기간 3년내의 단기적 성과 창출을 위해 주로 중견기업 이상을 대상으로 사업화 단계의 기술개발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광역선도사업은 R&D사업과 비R&D사업으로 구분되는데, R&D사업에 전체 예산의 74.2%가 지원되었다. 셋째,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매칭자금 없이 국비로만 지원사업을 수행하였고, 선도산업지원단이라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관리기관을 설립하여 사업의 집행 및 성과관리를 시행하였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성과: 지역의 신성장동력산업과 선도기업 육성

광역선도사업은 3년간 총 7,622억원을 투입하여 396개 과제(R&D 318개, 비R&D 78개)를 추진하고, 703개 기업(대기업 86개, 중견기업 35개, 중소기업 582개)을 지원하였다. 이에 따른 직접적 성과는 2011년 10월말 기준으로 지역기업의 석·박사 출신 기술개발인력 및 20~30대 청년인력 위주로 11,681명의 고용을 창출하였고, 태양전지, 그린카 핵심부품 등 유망상품에 대한 기술개발,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 광역 선도산업 및 시·도 전략산업 지원사업 비교

구 분	광역 선도산업	지역 전략산업
공간범위	· 광역경제권 · 광역권내 · 권역간 연계협력	· 시 · 도 · 시 · 도 행정구역 중심
사업목표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상품의 개발	· 지역산업 성장기반 조성
지원분야 · 지원규모	· 12개 산업의 20개 프로젝트 · 기업 지원 중심(R&D 등) · 프로젝트당 연평균 127억원	· 52개 지역전략산업 · TP · 센터 조성 등 산업지원기관 지원 · R&D 과제당 2억~5억원
관리기관	· 광역 선도산업지원단	· 시 · 도 테크노파크(TP)
투입재원	· 09 ~ '11(3년) 9,162억원 · 2,017(09)→3,295(10)→3,850(11)	· '99 ~ '11(13년) 4.1조원 · 3,756(09)→3,308(10)→2,688(11)

매출 5조 4,483억원, 수출 40억불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허출원은 663건, 특허등록은 131건, 투자유치는 11건에 4,50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량적 성과 못지않게 중요한 성과는 광역선도사업을 통해 지역의 선도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연계를 활성화하여 선도산업의 광역적 산업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지역산업 지원사업이 중소기업들의 혁신인프라를 구축하고 소규모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혁신활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광역선도사업은 지역의 중견 및 대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과 대 · 중소기업 간의 공동연구 및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업 협력업체의 유치 및 성장, 대 ·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유도하였다는 점을 중요한 성과로 들 수 있다.

광역선도사업과 같은 지원프로그램은 대기업의 제조업 부문 수출이 우리나라 산업 성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광역선도사업은 신성장동력산업, 녹색기술산업 등 국가적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이 커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성과가 크다.

한계와 향후 과제

광역경제권 정책은 그동안 지역의 경제 · 산업적 연계관계가 행정구역의 칸막이로 인해 과도하게 분절화된 것을 복원하고, 광역시 · 도 간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반하여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광역경제권 정책의 핵심사업인 광역선도사업이 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첫째, 기존의 선도산업이 광역경제권 전반에 파급효과가 크고 선도기능이 강한 산업들이 선정되었는가라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최근 광역선도사업 2단계 사업계획에서 기존 선도산업과 시 · 도 전략산업을 통합하여 기존의 광역권별 2개씩에서 4개씩 확대 지정하는 것을 통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기존의 지원사업은 프로젝트별 유망상품의 매출, 고용, 수출 등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여 지원사업을 통한 광역권 단위의 성과 파급과 확산효과를 상대적으로 경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지원받은 700여개 기업의 정량적 성과만 관리할 뿐 동일 산업내 미지원기업으로의 확산, 대학 · 연구소 ·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 활성화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선도전략산업의 광역적 산업생태계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성과의 확산 및 파급효과의 중시,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R&D사업의 확대 등이 긴요하다.

셋째, 지자체를 배제한 채 중앙주도로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체계에서 광역경제권은 지방자치단체의 느슨한 연합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느슨한 연합형태로 인해 지역 간 나눠먹기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참여를 배제하고 국가 주도로 한다는 것은 지방분권화의 트렌드와 맞지 않는다. 현행 행정체계의 한계 내에서도 지역주도적으로 광역선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업기획안이 지역 간 연계 · 협력을 통해 타당성 있게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지역간 나눠먹기를 방지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의 설계, 광역권 내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의 유도 등을 통해 지역의 참여와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

정성훈
강원대학교 교수
shjung@kangwon.ac.kr

경제성장과 지역불균등의 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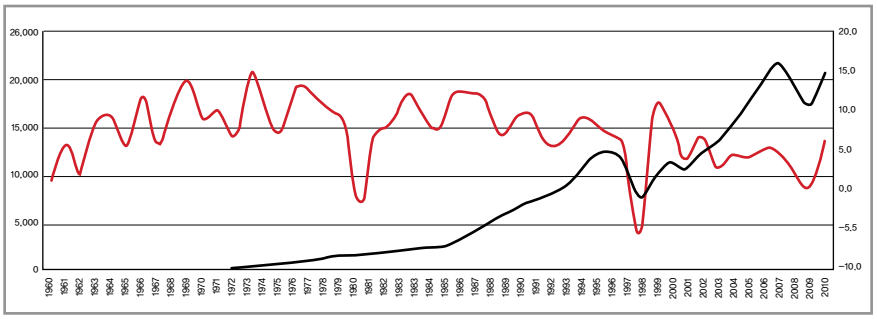
1960년 이후 GDP 성장률을 기준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약 2~3년을 주기로 성장과 쇠퇴가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60년 이후 1인당 GDP를 기준으로 장기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단기적인 성장과 쇠퇴는 지속적인 성장 속에 나타난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 경제성장을 이끈 대표적인 동력으로 제시되고 있는 노동생산성과 제조업의 연구개발 성과 등을 살펴보자. 노동생산성의 경우,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2005년에는 선진국을 초월하여 2010년에는 선진국들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제조업 R&D 지출액과 제조업 부가가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R&D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제조업의 부가가치도 함께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노동과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성과 고부가가치화 전략이 지난 50여년 동안 한국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지표들이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이와 같은 통계 세계에서 나타난 한국 경제와 실생활에서 겪는 한국 경제에 심한 격차감을 느끼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한국 사회의 불균등 지표를 나타내는 통계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지표로 한국의 지역 간 불균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변이계수와 지니계수, 타일지수 등을 살펴보면, 한국 경제는 1965~1968년과 1991~1997년의 단기적인 지역 격차 완화 국면을 나타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역 간 불균등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부 유럽국가들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맞물린 경제적 황금기 동안 지역 간 격차를 급격하게 줄이면서 불균등을 완화시켰다[1]. 그러나 한국은 지난 50여년 동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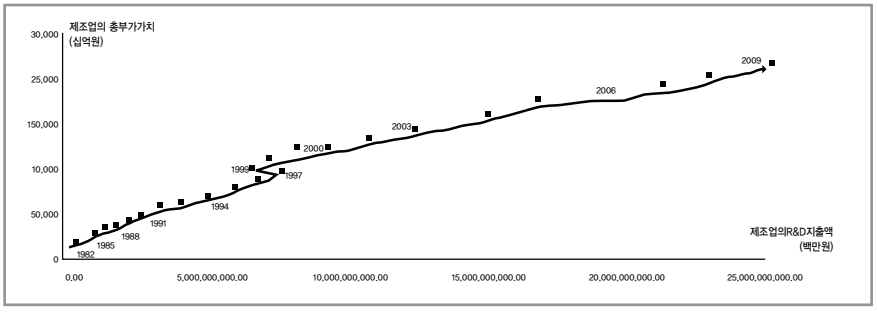
1) 서부 유럽에서 이와 같은 시기의 경제성장 방식을 포디즘(Fordism)이라 일컫는다. 이 시기 서부 유럽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제1차 오일쇼크가 있었던 1970년대 초반까지 급격한 경제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 1960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변화



자료 : 한국은행에서 필자 재구성

▶ 한국의 제조업 R&D 지출액과 제조업 부가가치의 상관관계(1982~2009)



자료 : 한국은행에서 필자 재구성

국가경제와 지역 불균등이 함께 성장하여, 과장하자면 '경제성장 = 지역 불균등성 증가' 라는 등식을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경제가 분배 없는 성장을 경험해 왔다는 것이고, 이러한 성장 방식으로 인해서 성장을 거듭할수록 지역 간 · 계층 간 위화감이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탄생되었다. 1998년 '동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다양한 공간적 · 사회적 불균등은 심화되었고, 국가의 주력 산업들이었던 의류, 섬유, 신발, 기계 산업 등은 지역적 차원에서 심각한 침체를 맞이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대구, 부산, 경남, 광주 등 4개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활성화시키고자 1999년부터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2년부터는 수도권을 제외한 9개 지역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 추진 현황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탄생되었다. 1998년 '동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다양한 공간적 · 사회적 불균등은 심화되었고, 국가의 주력 산업들이었던 의류, 섬유, 신발, 기계 산업 등은 지역적 차원에서 심각한 침체를 맞이하게 되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대구, 부산, 경남, 광주 등 4개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활성화시키고자 1999년부터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2002년부터는 수도권을 제외한 9개 지역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지역전략산업은 2002~2003년 동안 체계화기를 거쳐, 2004~2008년까지 확산기로 진행되어 왔다(김영수 외, 2007, 지역산업정책 10년 성과와 과제, 산업연구원).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전략산업은 광역선도산업과 지역전략산업으로 이원화되었고, 지역전략산업 예산의 일부가 광역선도산업으로 이관되었다. 이 시기 이후 세부 프로그램의 특성과 추진주체도 달

라지게 되는데 광역선도산업은 주로 R&D에 기초하여 광역선도산업지원단에 의해 추진되었다. 반면 지역전략산업은 테크노파크와 일부 지역의 지역특화센터에 의해 추진되었고, 기존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R&D,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의 특성을 수정·보완하면서 그 특성을 유지해 나갔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지역전략산업은 지역의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세부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혁신을 위한 집단학습(collective learning)의 계기를 만들었고, 지역사업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역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 동안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성과와 한계

1999년부터 정부 지원을 통하여 시작된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이 1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비수도권 중심으로 광역시도 단위에서 다양한 정책적 도구들이 활용되었다. 가장 중요한 성과들을 요약하자면, 지역산업의 물질적·사회적 혁신기반 신설·확충, 맞춤형 지역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노력, 전략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형성과 운영, 지역기술개발사업 운영, 전략산업 거버넌스 정비·확충 등 다양한 성과들을 거양하였다.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지역혁신체계를 바탕으로 하나의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성공하려면 최소한 30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가설에 기초한다면, 우리나라 지역전략산업은 이제 성장을 위한 중간 지점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5년이 더욱 중요한 시기가 된다.

첨단산업은 '실패 누적 산업'이라는 역설이 있다. 이는 많은 실패들이 기록으로 남게 되어 향후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됨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누적된 실패들을 되돌아보는 것은 향후 성공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지역산업육성정책의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한계는 정부 지원 정책이 지니는 한계이다. 이는 지역산업의 지원 범위에 해당한다. 산학연 개별 주체들에게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이 서로 얽혀 있는 생태계에 지원할 것인가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더 큰 문제점은 어느 쪽을 지원해도 성과 도출이나 수혜 범위를 두고 늘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한계는 구조적으로 깊게 뿌리내린 수도권 대 비수도권 간의 격차 줄이기이다. 이의 전형적인 문제점들은 인력양성사업에서 잘 나타난다. 비수도권에서 양성한 인력들은 일자리를 찾는 데 있어서 수도권을 선호한다. 이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자 지난 50년 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제성장이 비수도권지역에 안겨 준 역효과이기도 하다.

세 번째 한계는 비수도권의 지역 간의 나타나는 것으로 산업선발지역과 후발지역 간에 격차이다. 기존의 평가와 지원체계는 이 격차를 크게 감안하지 못한 채 이루어졌다. 마지막 한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담기관 간에 형성되는 거버넌스 구축의 문제이다. 지역전략산업은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및 가이드라인 제시, 지방정부의 예산 지원과 적극적 이행을 축으로 수행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지역적 차원에서 이는 폭넓은 정치구조와 연관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역전략산업의 선순환 구조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앞으로 15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향후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은 비수도권 내에서도 지역의 규모와 산업역량에 따라 정책적 도구를 달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도시 중심의 선발산업지역과 후발산업지역들에 대한 지원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인력양성사업은 비공간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상호 연계협력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기점인 1960년대를 돌아보자.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지난 50여년 동안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제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역사는 약 14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부터가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본격적인 추진시기가 될 것이다.

ÑÉ` ‘¸ -¿•<

ã ^ d

± _ÄìI hšlŽ
LMOPB!TUSBCBTF DPN

ÑÉ` ‘¸ -¿•<D P Â vÓ

ÑÉ` ‘¸7 ´>ƒ•D x;‘¸5ý üç ÑÉD ƒlñ8 ~•ÞŠ ÑÉy
SD ¿b Â ´> ƒ•¿b8 (}Þ× ÝÈ‘¸ CBTJD JOEVTUSZ 5ý² ÑÉD W
— ¢2ñ8 Ž ÞÈ ÑÉ ; •¿8 ¤‘ ••Þ× `¿8 Ä 5ý ÑÉx
5ý :® $3 >Ñv² ÑÉr Š Â >>– 9y a ÑÉƒ•D ¿b8 ±(
á û S× ‘¸8 D·àî Ñ'ƒ• > vÓÞŠ S× ÑÉ` ‘¸ -¿•< I
Þ ÑÉ` Ž¸ 7 ÑÉD `¿— ÈdÀ O× ´‘¸8 Ê·h-¿ÞÝ $ç Ñ
ÉÊyD è,±SK ‘hßhËI º,I :¯ ÑÉ (S…3 ³wÞŠ ÑÉ (
ÉÝ8 J ÞÈ ÑÉ‘¸ ƒlñ •Š Â W@ ÑÑ ÝÈ8 CòÞ× Ž¸Iî
™ ÑÉ ßÀ ³w; b: 8 >ç ÑÉÝ¸8 Ñ Þ× ÑÉ (Ã ÝÈ
‘¿Ž¸ IÞ 3*$Ž¸ 8 &X5ý ™ déÑ ÑÉËŠW D ‘¸
3 $à ÑÉËŠ‘¸ -¿Ž¸ IÞ 3*4Ž¸ ÑÉËŠ‘¸D ‘¸ Ñ Ë³×
¸@8 $à ÑWSË³× ¸@Ñ Ž¸ IÞ 33*Ž¸ 8 Ä 5ý vÓ:Š Sî

Ü ÑÉ` Ž¸D vÓ Â Ž¸r

vÓ

r	r	r	r	r	r	r
ÑÉËŠ‘¸Ó\Ž¸ 3*4			ÑÉËŠ‘¸Ó\Ž¸ 3*4 ÑÉ (—•Ž¸	ÑÉËŠ‘¸Ó\Ž¸ 3*4 ÑÉ (—•Ž¸ 33* ÑWSË³×	ÑÉËŠ‘¸Ó\Ž¸ 3*4 ÑÉ (—•Ž¸ 33* ÑWSË³× 3*$ ÑÉ (Ã	ÑÉËŠ‘¸Ó\Ž¸ 3*4 ÑÉ (—•Ž¸ 33* ÑWSË³× 3*$ ÑÉ (Ã

Ž¸r

33* ÑWS Ë³×	ÝÈ‘¿	ÝÈ³w	d› b:	P	` ‘¸	™	P Ë³×
3*$ ÑÉ (Ã	ÝÈ‘¿	ÝÈ³w	b:	P	` yÚ	™	h P Ã E P
3*4 ÑÉËŠŽ¸	• Ñ ÝÈ‘¿ Ž¸ bÓ Ýÿ PÊ	Kñ¨¿	®-	P	` Ž¸	™	h P Ã E P
		Ë… 2	®(				
		Ý¸Ñ	C¾t ÝÿÑ				
		ÝÿPÊ	•¿				

RIC사업은 지역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장비 구축과 더불어 산업화가 시급한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지방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RIS사업은 지역별 특화가능한 산업분야를 발굴, 고부가가치화 및 브랜드화를 위한 기술 개발, 사업화, 마케팅 지원 등 소프트웨어 지원 중심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RRI사업은 기초지자체(시 · 군)가 중심이 되어 지역연고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필요한 산업화지원 연구소 설립 등을 지원하여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기술혁신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정책의 성과 및 과제

현재까지 추진된 지역특화사업의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시군구 등 기초생활권에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선도할 지역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점이다. 전국 234개 시군구를 기준으로 RIC는 총 127개 센터를 지원, 현재 93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RIS는 총 126개 사업단을 지원, 현재 95개 사업단이 운영 중에 있고, RRI는 총 19개 지자체 연구소를 설립, 운영 중에 있는 등 지역특화산업 및 기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둘째, 지역기업과의 공동R&D, 기술지원 등 지역특화산업 기술역량 강화 제고 측면이다. 원주 연세대첨단의료기기 RIC의 경우, 군사도시 원주를 의료기기산업의 메카로 육성('02~'09년 동안 의료기기업체 280% 증가, 생산액 542% 증가, 고용 329% 증가)하는 등 지역브랜드 및 위상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지역내 특화자원의 제품화를 유도하여 향토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의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니트산업연구원 RIS의 경우, 지역기업인 S社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한지사(絲) 신섬유소재를 개발하여 250억원의 신규시장을 개척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지역특화자원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구성원의 지역자립화 의식 개선 및 공동체 의식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 한정되어 지원하는 칸막이형 정책체계로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지역특화사업내 세부사업간 연계협력 미흡으로 정책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 그동안의 시설 및 장비 구축 등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자원이 집중되어 지역특화산업의 본격적 육성을 위한 특허, 첨단융복합기술, 연구노하우 등 소프트웨어 지원역량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특화사업의 성과를 이어나가고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 정책틀에서 벗어나 지역특화산업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역 및 지원체계를 개방하고 융복합기술을 지원하는 개방 · 융합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업추진 주체간의 정책공유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정책 및 산업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 프로세스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의료산업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 지역특화자원의 제품화 성과인 한지사 의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2단계 육성정책 방향

조현훈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사무관
chhun007@mke.go.kr

그간의 성과 평가

2008년 정부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 광역화 추세에 맞추어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을 도입하여,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나누어 선도산업 육성,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양성 및 30대 선도 SOC 사업[1]을 추진 중에 있다.

지식경제부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1단계 사업('09 ~ '11, 이하 1단계 사업)을 통해 광역규모의 산업생태계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의 신성장동력 육성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LED 등 신성장동력의 산업생태계가 비수도권 지역에 형성되는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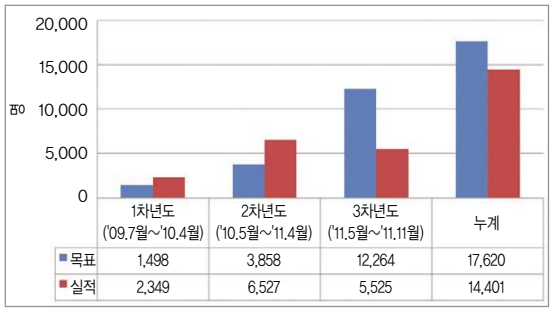
지난 1단계 사업에서는 12개 선도산업 · 20개 프로젝트에 703개 기업 등 1,100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3년간 매출 8조 8천억원(수출 55억불 포함) 및 고용창출 17,600명을 목표로 총 7,62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광역경제권별로 고용, 매출, 수출 등에서 사업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 광역경제권별 매출 및 수출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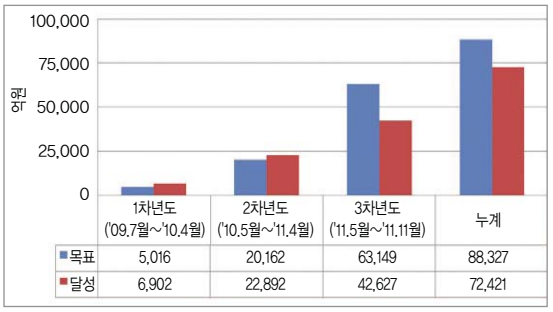
권역	광역경제권별 매출 및 수출 성과
충청권	디스플레이, 의약 바이오, 태양광 셀 등에서 2조 1,725억원의 매출, 14.4억불 수출
호남권	태양광 부품, 풍력, 광부품 소재 등에서 1조 2,733억원의 매출, 4.3억불 수출
동남권	그린카 핵심부품, 해양플랜트 등에서 1조 7,882억원의 매출, 7.7억불 수출
대경권	수소연료전지, 로봇, 의료기기 등에서 1조 1,108억원의 매출, 3.4억불 수출
강원권	의료융합, 의료관광 등에서 2,461억원의 매출, 0.8억불 수출
제주권	물산업, 관광레저 등에서 6,512억원의 매출, 1.9억불 수출

1)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위원장 : 시 · 도지사 공동)를 신설하고, 선도산업 육성(지경부), 인재양성(교과부), 30대 선도 SOC 사업(국토부)으로 역할분담

▶ 선도산업의 고용효과



▶ 선도산업의 매출액



'11년 12월말 현재, R&D 석·박사인력 및 20~30대 청년 인력을 총 14,401명[2]의 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태양전지, 그린카 핵심부품 등의 유망상품에 대한 기술개발,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총 7조 2,421억원의 매출, 33.3억불 수출을 달성함으로써, 1단계 최종년도인 '12년 4월까지는 당초 성과목표에 무난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단계 사업 추진정책 방향

2011년 12월, 지식경제부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2단계('12~'14) 사업(이하,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해 각 광역경제권에서 합의하여 제출한 22개 선도산업과 40개 프로젝트를 최종 확정하였다. 권역별로는 (충청권) 태양광부품, (호남권) 친환경 차량·부품, (대경권) 스마트모바일, (동남권) 그린선박조선기자재, (강원권) 전자의료기기, (제주권) 제주형 풍력서비스 등 총 40개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하여 광역단위 산업클러스터를 본격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2년에 500여개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2,850억원을 투입하고, '14년까지 약 1,500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25,000명의 신규고용 창출과 약 10조원의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부지원과제 선정을 위해 '광역발전위원회' 등 지역주도로 2단계 사업 프로젝트 기획을 추진('11.12.~'12.2.)하였다. 기획 과정에서는 KIAT가 중심이 되어 중앙차원의 기술 컨설팅 지원을 통해 국가 R&D 정책과의 정합성, 중복성 등을 점검하는 자문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중앙에서 추천한 기술전문가들이 권역별 기술기획위원회에도 참여하여 프로젝트별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한 바 있다.

권역별로 제출된 프로젝트 기획 결과에 대해서 '12년 2월 21~24일간 개최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프로젝트별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였고, 지역산업지원소위원회(3.12)에서 권역별·프로젝트별 지원예산 규모를 최종 확정하였다. '12년 4월까지 사업 공고 및 사업자 선정절차를 마무리하여 5월부터는 2단계 신규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2단계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세부프로그램을 일자리 창출 및 인재양성, 광역규모의 산업생태계 조성[3]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세부 개편내용으로는, 첫째, 일자리 창출 및 중소·중견기업의 지역 우수인재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2단계 사업부터는 전체 R&D 사업을 고용창출형 R&D로 전면 전환하여 R&D 사업 주관·참여기관에게 신규 인력 채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매년 고용성과를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기업별 지원예산에 차등 반영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하게 된다. 한편, 석·박사급 연구인력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채용조건부 R&D를 전체 R&D사업의 10%

2) 호남권(3,619명), 충청권(2,935명), 동남권(2,970명), 대경권(3,211명), 강원권(1,417명), 제주권(249명)

3) 시·도 경계를 넘어 기업지원기관-기업-대학간의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고 소재-부품-완성품(시스템) 등 Value chain간의 연계협력을 촉진

▶ 광역경제권 2단계 선도산업

충청권 IT · BT · NT · GT 기반의 선도 산업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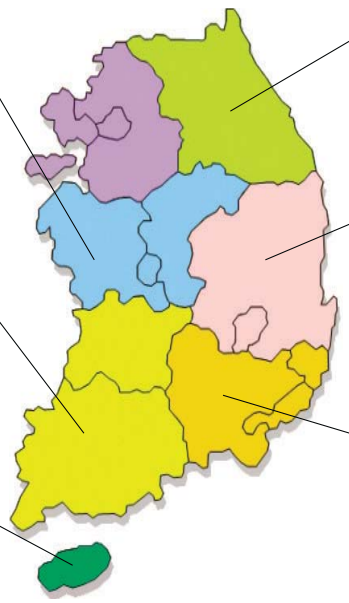
산업	프로젝트
의약바이오	차세대의약
차세대에너지	태양광(부품), 이차전지, 나노융합소재(화학소재)
NEW IT	무선통신융합, 반도체, 디스플레이
융합기계부품	동력기반기계부품

호남권 녹색산업 융복합화 및 에너지 저소비형 친환경 산업 육성

산업	프로젝트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소재), 풍력시스템 · 모듈
라이프케어	바이오식품, 바이오활성소재
광융복합	광부품 및 시스템, 신광원조명
친환경수송기계	친환경 차량 및 부품, 그린 · 레저 선박

제주권 첨단 녹색성장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도약

산업	프로젝트
풍력서비스	제주형 풍력서비스
차세대식품 융합	청정헬스푸드, 뷰티향장
MICE	휴양형 MICE



강원권 동북아 생명 · 건강산업의 신발전 지대 구축

산업	프로젝트
기능성신소재	세라믹/비철소재부품
바이오메디컬	의생명바이오, 전자의료기기
헬스케어	헬스테인먼트

대경권 유망업종의 미래성장동력화 및 주력산업의 첨단화 실현

산업	프로젝트
그린에너지	태양광(장비), 연료전지
IT 융복합	의료기기(치료/헬스케어기기), 실용로봇
스마트기기부품	스마트자동차부품, 스마트모바일
첨단융합소재	첨단금속 · 세라믹소재, 하이테크섬유소재

동남권 주력산업 고도화 및 그린 신산업 창출

산업	프로젝트
에너지플랜트	풍력부품, 원전설비
그린화학소재	화학융합소재
수송기계	지능형기계부품, 친환경차량부품, 항공
조선해양	해양플랜트기자재, 그린선박조선기자재

규모로 시범 도입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확보를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기업이 전문학사 및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졸업 인력을 채용할 경우 채용장려금(연봉의 60% 이내, 최대 100만원/월)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인력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현장 기술인력 채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둘째, 광역경제권 차원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기업 단독 또는 기업-기업간 추진하는 R&D보다는 광역권내에서 지역기업-대학-기술혁신지원기관간의 산 · 학 · 연 공동 R&D,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형 R&D 등을 우선 선정 ·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사업 참여조건을 대형과제의 경우 1단계 사업에서는 매출액 200억원 이상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 반면, 2단계 사업에서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지역 중소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셋째,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선도대학(LINC[4]) 지원사업과 긴밀히 연계하여 산학협력선도대학이 권역내 지역기업에 대해 우수인력을 양성 공급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질적 협력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업-대학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선도사업지원단-지역기업-선도대학간 '산학협력협의체'를 구성 ·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측면에서는 권역별 · 프로젝트별 사업 추진성과를 매년 중간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30~40% 범위 내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차등 지원함으로써 상호 경쟁을 유도 할 계획이다. 2단계 사업부터는 연차별 평가에서 하위 10% 정도의 강제 탈락시키는 제도를 규정화하여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4) LINC(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 육성정책 확대 개편

정만태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소장
mtjeong@kiet.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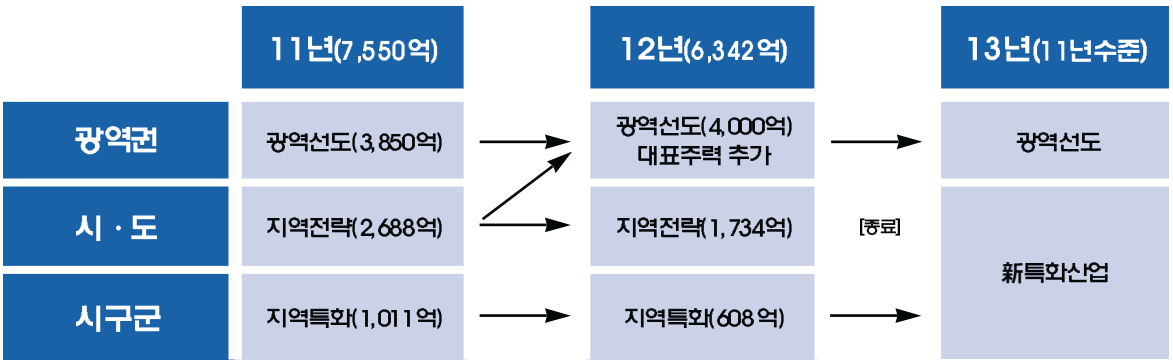
추진 배경

시 · 도별로 2~4개 산업을 지정 · 육성하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은 '12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인 지역전략산업의 일부는 광역경제권 2단계 사업 계획에 따라 '12년부터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으로 흡수 · 전환되어 지원될 예정이다. 동 사업은 지난 '99년 4개 지역(대구, 부산, 경남, 광주)의 사업을 착수한 이후, ' 02년 9개 지역(대전,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북, 울산 등)을 추가 지원하였고, ' 08년부터는 Post 4+9 추진계획('08.9)을 통해 13개 지역을 통합 · 지원 중이다. 그리고 시 · 군 단위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특화산업 육성사업으로는 지역연고산업 육성(지역연고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지역혁신센터(지역 대학 특성화 분야 장비 구축 활용), 지자체연구소(지역연고자원 산업화 지원)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의 산업성장 기반이 확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역의 자생적 발전역량은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R&D투자와 우수 인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난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GRDP의 비수도권 비중은 '08년 대비 '09년 0.6% 포인트 하락한 51.3%에 머무르고 있고, 수출의 비수도권 비중은 '08년 대비 '10년 5.1% 포인트 감소한 67.4%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전략 · 특화산업을 토대로 시 · 도의 주력 · 성숙산업으로서 지역의 수요가 높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산업에 대한 지원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지역전략산업의 일부를 포괄하는 시 · 도별 특화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존 지역사업 성과의 계승 · 확산, 광역 2단계사업의 한계성 보완 등을 위해 가칭 신지역특화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지역산업 육성사업의 개편방향



시 · 도 단위 산업육성의 지속 필요성

시 · 도 단위 산업육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을 몇 가지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산업 육성 관련 지역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 단위 산업육성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예컨대 지역의 산업육성 수요를 탄력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완충형 사업이 없을 경우, 그에 따른 풍선효과로 지역산업정책의 틀 안에서 제어하기 어려운 대형 지역사업의 확대가 우려된다. '10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에 근거한) 지역사업의 예산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11년부터 이들 사업이 광역계정으로 편입됨에 따라 지역산업정책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광역권 2단계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한계성 보완을 위해 시 · 도 단위 산업육성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광역권 2단계사업은 국가산업정책의 지역적 전개를 위한 중앙주도의 지역산업정책이라는 태생적 특성으로 인해 광역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앙주도 광역사업에 대한 과도한 편중은 지역의 역동성과 지자체의 산업육성 의지 약화를 초래한다. 지역에서는 광역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광역사업의 특성상 지역주도 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주도형 지역사업의 동시 추진 · 연계를 통해 중앙주도 지역산업정책의 한계성 및 비효율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지역산업정책의 예산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 · 도 단위 산업육성에 대한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지역의 현안사업 위주로 지역산업 육성이 추진될 경우 수요 기반의 사업보다는 공급자 관점의 사업 위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관점보다 산업 관점에서의 편향적 접근, 타당성조사의 전문성 부족, 비경제적 요인의 개입 등으로 인해 과잉투자, 예산효율성 저하 등이 초래될 수 있다. 지역기업의 상당수가 정책의 예측가능성에 기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축소는 기업의 탈지역화, 기술개발 및 투자 감소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정책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시 · 도 단위 산업육성은 지역산업정책의 근간으로서, '지역간 발전격차 해소(형평성 원칙)와 지역별 특성화에 따른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정책을 유지하는 한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정책 개편 방향

향후 지역특화산업 육성정책 개편 방향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은 시 · 도별 산업기반을 토대로 산업 클러스터를 선정 · 육성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해 나가도록 사업

▶ 주문진 특화산업 상품, 흑마늘오징어육포

자료: 강원도립대학 주문진오징어특화사업단 홈페이지

▶ 충주 특화산업 상품, 사과 농축액과 사과비타민

자료: 강원도립대학 주문진오징어특화사업단 홈페이지

▶ 한산특화산업상품, 세모시

자료: 서천군청 홈페이지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 번째 유형으로 산업집적도, 특화도, 성장성 등에 기초하여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시 · 도 차원의 주력산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일정 수준의 기술혁신기반을 확보하고 있고 성장률이 높아 향후 지역경제 기여도가

▶ 지역특화산업 유형

지역특화산업 유형
1- 시 · 도 차원의 주력산업
2- 시 · 도 차원의 신성장산업
3- 제조업기반 뿌리산업
4- 숙련집약형산업
5- 원자재, 기능성물질 활용형 시도연고산업

크게 기대되는 시 · 도 차원의 신성장산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제조업기반 뿌리산업(금형, 주조, 단조, 열처리, 표면처리, 도금, 소성가공, 용접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유형으로는 숙련집약형산업(지역 내 고용창출 효과가 지대한 산업, 의류 · 봉제, 신발, 인쇄, 귀금속 · 보석, 안경, 가방, 도자기, 가구, 악기, 점토, 치기공 등)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다섯 번째 유형으로는 원자재 · 기능성물질 활용형 시 · 도연고산업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역특화산업은 광역선도전략산업과 차별화가 가능하고, 시 · 도 간의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산업을 선정 · 지원해야 하며 시도 간 산업 중복 최소화를 위한 중앙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 및 컨설팅 강화가 필요하다. 시 · 도 간 협의체를 통해 시 · 도 특성화를 위한 특화분야 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획-집행-평가 등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지역의 자율과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며 현행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통한 지역의 자율 조정 및 성과관리 강화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R&D 및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지원 등 S/W사업을 강화해야 하며 기업의 현장수요에 기초한 지원프로그램을 R&D와 기업지원서비스로 통합 · 단순화해야 할 것이다.

지역산업 육성 지원제도 개편

정종석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
jsjung@kiet.re.kr

배경 및 필요성

지난 10여 년간 각종 지역산업지원사업이 지역의 산업육성 기반을 확충 · 확대하는 데 주력한 결과, 지역별로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 및 잠재력이 일부 확보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1년에도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7개 부처 · 청이 25개 사업(세부내역사업 기준으로는 44개)을 통해 1조 6,790억원을 지원하였고, 이는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 내 광역발전계정 중에서 2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SOC사업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 지원사업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산업 · 기업지원, 인적자원개발 및 산학협력, 과학기술진흥 등)를 개별적으로 확충 ·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지원사업 간의 연계 추진을 통해 이들 요소의 결합 · 융합에 의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정책 개선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주도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지역산업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자기 지역의 여건 · 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지원사업은 추진체계가 개별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그에 따른 개별사업 간의 칸막이 운영이 고착화되어 있어 지역이 주도적으로 이들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세부과제 단위의 예산편성, 사업기획 · 조정 권한을 지역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사업별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지역 차원에서의 통합적 기획 · 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광특회계(광역발전계정)의 구조 개편과 지역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각종 지역산업지원사업을 광역발전계정의 지역자율형 사업으로 분류하고, 이들 사업에 대해서 지역 차원의 자율적인 예산편성 ·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

▶ 광특회계 편성체계

편성방식 \ 계정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지역자율형	중앙주도형	
지자체 자율편성	시도자율편성사업	–		시도자율편성사업
	시군구자율편성사업	–		특별지방행정기관경비
부처편성	–	시도자율편성-부처조정사업	부처 편성사업	부처편성사업

록 예산편성절차 및 관리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중앙 전담기관→사업 수행기관'의 현행 추진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 전체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기획 · 조정 · 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시 · 도별 관리기관을 설치 · 운영할 필요가 있다. 광역경제권의 관리기관은 독립적으로 설립 · 운영하는 것보다 시 · 도 단위 관리기관의 합동조직으로 설치 · 운영하는 것이 광역경제권 · 시도 단위 사업 간의 분절 해소, 시도 지자체에 광역경제권 단위 사업에 대한 책임성 부여 등의 효과를 실현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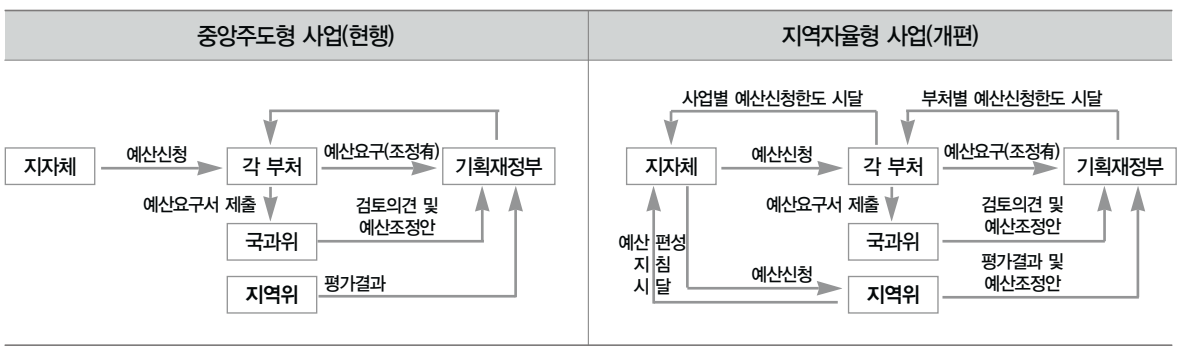
셋째, 지역자율형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분야의 조정, 세부과제의 예산조정, 사업프로세스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통합 추진계획을 지역 주도로 수립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앙은 관련 부처의 통합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전조정 및 컨설팅 등을 통합 실시하는 방식과 같이 중앙-지역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지역은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한 조사 · 분석 기능을 (가칭)지역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되, R&D사업의 경우는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기관)가 참여하는 (가칭)지역R&D위원회를 설치하여 R&D전략 수립 및 R&D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 자율의 지원체계 및 성과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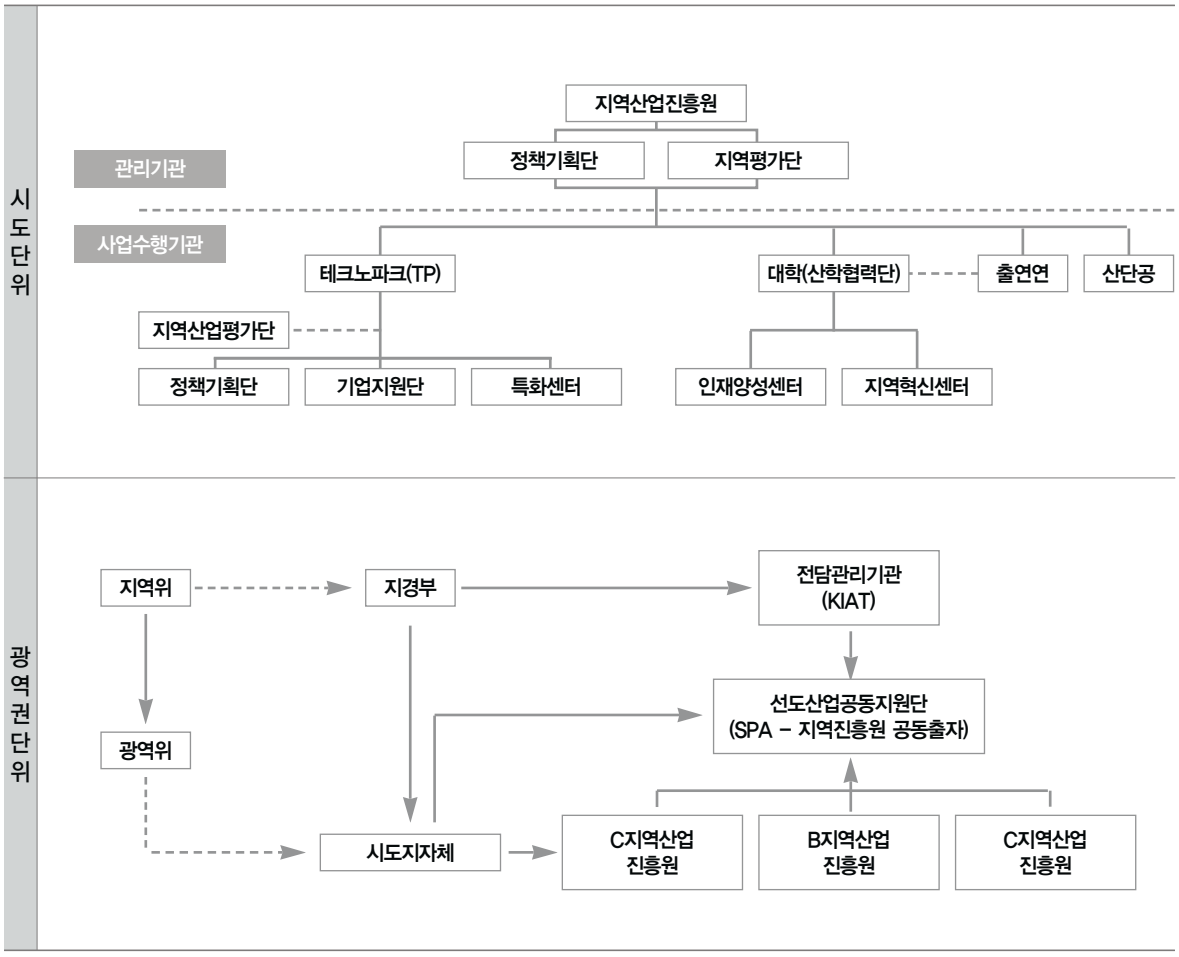
지역 주도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과 함께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련 예산 · 회계제도의 개편이 선행되더라도, 지역 현장에서의 집행 시 지역의 산업 여건 ·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지원수단, 지원프로그램)가 적정하게 구축 · 운영되지 못한다면 통합적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한편, 통합적 추진의 성공 여부를 점검 · 파악하고,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가 적정하게 구축되지 못한다면, 지역 주도의 통합적 추진은 성과를 창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합적 추진에 따른 종합성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도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지역 자율의 현장맞춤형 지원

▶ 지역자율형 사업의 예산편성절차 개편(안)



▶ 지역산업지원사업의 지역주도 통합거버넌스 개편(안)



▶ 지역산업지원사업의 지역주도 통합거버넌스 개편(안)

시도지자체	집행단계	평가단계
지역 주도의 통합적 추진체계	지역 자율의 현장맞춤형 지원체계	지역의 과제평가와 중앙의 종합성과평가

체계 구축', '중앙-지역 간의 역할분담(지역의 과제평가 → 중앙의 종합성과평가)에 기반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을 시스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지역산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역 주도의 통합적 추진이 성공적으로 착근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적격성평가제도의 도입, 지역R&D의 중복성 검증체계 강화, 지역기업 대상의 패널기업조사체계 구축 등의 정책과제를 추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방안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실 실장
doowoncha@kistep.re.kr

지자체 내 정부연구개발사업 추진 현황

근래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내에 설치된 대학, 출연연 분원, 테크노파크, 지자체연구소, 과학연구단지, 전문생산연구소, 지역혁신센터, 지역연고산업지원단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혹은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대부분 대상은 중앙정부 부처 사업에 지자체가 지방비 매칭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그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수행중인 정부연구개발사업 운영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예비타당성평가를 통과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주·수행하는 기관은 나름 자부심 있고 야심찬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특정부처 사업으로 설립되고 지원기간이 종료하여 자립기에 들어 운영비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관의 어려움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 전략산업도 아니고, 함께 수행하면 사업비 및 참여진 규모가 확대되고 협력이 기대되는 등 시너지가 예상되는데 중앙정부 지원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유사한 임무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들 기관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제공하는 중앙정부 및 관리기관 평가에 지자체가 관여하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관내에 설치된 기관과 수행하는 사업이 지자체 경제, 산업, 과학기술, 고용창출 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싶어 한다. 이것이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현실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협력체제 구축

지역발전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을 담당하는 지역발전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 원활한 정책 협력과 조정이 미흡하다. 그러다 보니 지경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교과부(한국연구재단), 중기청(지방중소기업청) 등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행 중인 정부사업들 간 유사·중복, 미흡한 협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관련 사업

조정 메커니즘은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대학, 과학연구단지, 연구개발지원단), 지경부(테크노파크 등) 등 주요 부처 사업에 대한 중복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지자체 내 관련 기관 간 사업수주 경쟁 등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지경부의 단기적 성과창출이 가능한 응용·개발 및 기업지원 분야, 교과부의 인력양성사업 및 기초연구 분야, 중기청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상호간의 실질적 연계와 협력이 어렵다.

1999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는 전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매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실적점검 서면결의만을 담당하는 등 실질적 기능에 논란이 있어, 2010년 전원 민간위원으로 교체되는 등 활동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관련 과학기술기본법에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추진 지역R&D 관련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조정」이란 기능적 근거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지역R&D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은 미흡한 실정으로 전담조직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역발전위원회의 조정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선도산업(광역), 전략산업(시도), 특화산업(시군구) 등 3단계로 지원되는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할 부문과 지역의 자발적 의사와 내생적 발전을 도모해야할 부문으로 체계화하고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수혜대상 지역에 실질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역발전 및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등을 대상으로 관련 부처 및 지자체 간 연계체제 구축을 공고히 하여 융합시대, 지식기반 사회 등 패러다임에 대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지자체 R&D전담기구 및 과학기술위원회 설치

중앙정부 재원 의존도가 높고 지자체 재정자립도 및 예산 부족 문제 등에 따라 지자체 매칭과 자체 R&D 투자 규모의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자체의 독립적 과학기술 및 산업 관련 정책 추진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대규모 혹은 단시일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중앙정부 사업 수주에 집중하는 등 지자체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전략적 R&D 전략 추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자체도 중앙정부 거버넌스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 16개 지자체 가운데 9개 지자체가 지역과학기술(진흥)협의회 등의 명칭으로 지자체 과학기술 종합조정심의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 활동은 미미하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분석, 기획·평가 및 성과확산 등을 담당하는 R&D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이 교과부에서 추진 중이나 부산, 충북, 대구, 전북, 경기 등 5개 지자체에만 설치되어 있고 설치근거가 미약하여 효율적 운영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본 사업도 지경부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과의 기능 중복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지자체 내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지자체의 효율적인 산업 및 과학기술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지원단 형태의 R&D전담기구를 과학기술기본법에 수행기능 및 근거 등을 명확히 하여 위상을 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미설치된 지역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기존 R&D거점(테크노파크 등)을 활용하여 연계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근래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중심의 R&D 추진을 위한 R&D 포괄금제도 확대, 역제안제도 신설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그간의 중앙정부 주도 지역R&D 추진에서 수요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예견하고 있다. 더구나 대구, 광주 등 R&D특구의 추가 설치, 대학중심의 지역R&D 추진을 위한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 등 지역R&D 추진체계는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중앙정부, 지자체 내부의 거버넌스 정립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거버넌스 사이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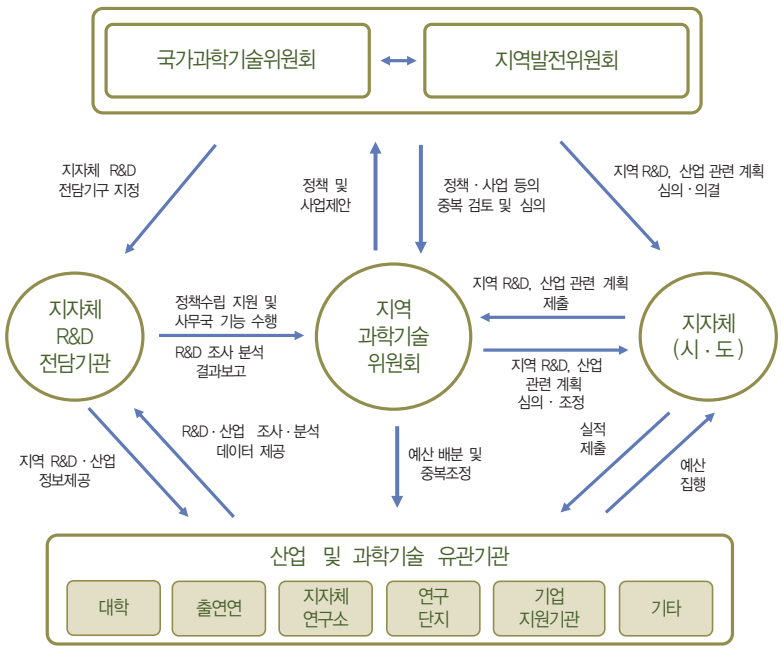
영을 활성화하고 R&D전담기관을 사무국으로 지정하는 등 지자체 R&D 거버넌스 정립과 이를 활용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혹은 지역발전위원회 등과의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물론 짧은 시간 내 이해당사자 간에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나, 더 늦기 전에 추진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체제 구축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들은 많다. 지방R&D와 지역R&D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국가R&D와 지역R&D 간 역할분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역할 분담 및 관련 부처와의 협력체제 구축, 지역 인력 정주 및 양질의 고용창출 방안, 지자체 R&D전담기관 지정, 지자체 주도 R&D사업 기획 등이 지역R&D 효율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이다. 지자체 관점에서 바라보면 관내에서 수행되는 산업, R&D, 지역 발전 등의 사업을 어느 중앙부처가 지원하는지는 큰 의미가 없다. 모든 사업이 해당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되는 것이다.

▶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산업 거버넌스 비교

구분		과학기술 거버넌스	산업 거버넌스
상부	조직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지역발전위원회 광역발전위원회
상부	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
상부	주요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상부	관리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하부	지방정부	지자체	지자체
하부	관리기관	대학별 산학협력단 지방과학연구단지 지역거점연구단	선도산업지원단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하부	정책대상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대학
지향점		과학적 관점 지역 과학기술역량강화	산업적 관점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관련사업		지방대학경쟁력기반확충사업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역기초연구활성화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등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등
중점 영역		기초과학육성과 인력양성	응용, 개발기술개발
성과측정		논문, 인력양성 등	특허, 매출액, 기술이전 등

▶ 지역R&D 거버넌스 구축의 예



충청권 2단계 광역선도산업 육성전략

이근호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선임연구원
8114@korea.kr

충청권 2단계 광역선도산업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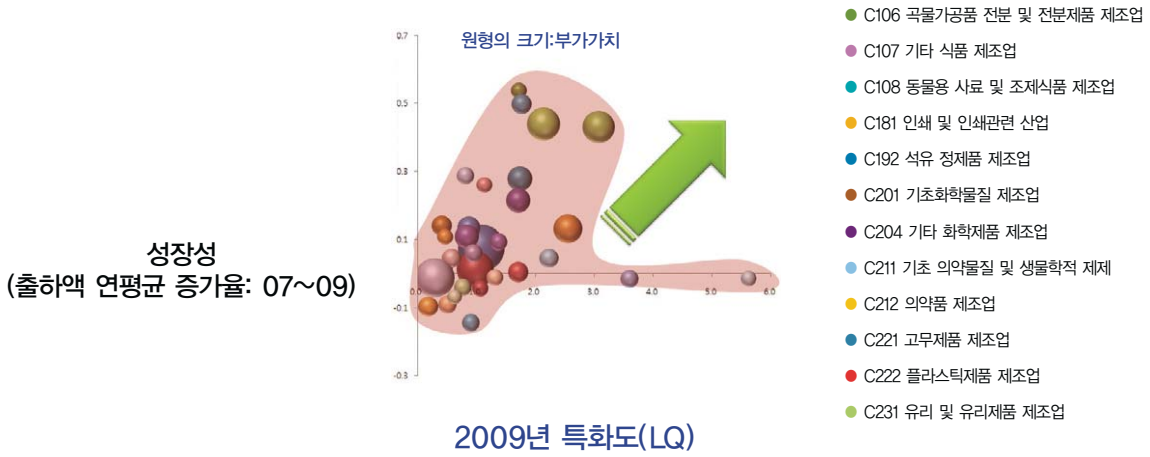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광역화와 분권화가 필요하게 되었고, 중앙정부의 지역산업 육성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시 · 도 단위에서 광역단위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새로운 사업군의 선정이 필요한 시기에 1단계 선도전략산업이 종료됨에 따라 시 · 도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2단계 광역선도산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충청권에서도 지역사업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새롭게 2단계 광역선도산업을 추진하며, 지역산업지원체계 전면 개편에 대응한 광역선도전략산업의 발굴을 위해 1단계 선도산업과 연계된 사업을 집중 발굴 육성하고자 한다.

충청권의 1단계 선도전략산업은 'New IT' 및 '의약바이오'로서 인재양성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 취업박람회 등을 통한 선도산업의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2011년 기준 2,500여명의 고용창출과 매출 8,470억원, 수출 4.432억불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충청권은 세종시 출범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본격화 등으로 명실상부 행정 · 과학의 중심, 교통 · 국방의 요충지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삶은 그리 넉넉지 않고 고령화와 저출산, 고용불안과 농어촌 정주기반 취약, 그리고 최근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충청권에 이전한 상당수의 기업들이 다시 U턴하여 수도권으로 되돌아간 데 따른 아픔 또한 함께 내재된 것이 작금의 충청권의 현실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첨단과학기술의 허브」로서 충청권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이 될 2단계 광역선도산업 수립은 의미가 매우 크며, 충청권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충청권 유망산업 특화도와 성장성(07~09)



충청권 2단계 광역선도산업 주요내용

충청권의 2단계 광역선도산업은 선도전략산업과 시·도의 전략산업간 비교우위 산업의 특성을 세 가지 기준(집적도, 특화도, 성장 유망성)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전국과 충청광역경제권(대전, 충남, 충북)의 산업들을 비교·분석하여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선정된 충청권2단계 광역선도산업은 다음과 같다.

선도전략산업은 미래성장동력산업과 대표주력산업으로 나누어 진다.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는 차세대에너지산업, 의약바이오산업을 선정하였으며, 대표주력산업으로는 New IT산업, 융합기계부품산업을 선정하였다. 또한 미래성장동력의 산업군중 차세대에너지산업의 경우 태양광프로젝트 등의 3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였고 의약바이오산업의 경우 차세대 의약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 선도전략산업 도출 결과

구분	산업	프로젝트	유망품목
미래 성장 동력	차세대 에너지	태양광 (부품중심)	셀/모듈 구성 부품, 시스템/설치 부품 (글라스, 기판, 타겟, 백시트, 리본, 필름, 케이블, 정션박스, 프레임, 인버터 부품, 트랙커부품, 전력제어부품)
		이차전지	단위셀 및 구성소재, BMS, 시스템구성부품
		나노융합소재 (화학소재기반)	나노코팅, 고기능 멤브레인, 고성능 촉매, 정밀화학제, 고기능 첨가제
	의약 바이오	차세대 의약	합성의약품, 생물의약품, 의약용소재, 진단용소재, 의료용소재, 동물의약품
대표 주력 산업	New IT	무선 통신융합	무선통신융합정보기기, 근거리무선통신시스템, RFID/USN 시스템, 차량/선박용 무선기기, 무선원격계측시스템
		반도체	시스템반도체, 화합물반도체, 반도체제조장비
		디스플레이	차세대D/P, D/P용 부품/모듈, D/P제조장비, OLED
	융합 기계부품	동력기반 기계부품	제어부품 및 기기, 자동화모듈 및 시스템, 시트 및 능동 공조 부품

대표 주력산업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강점을 보이고 있는 New IT산업과 융합기계부품산업을 선정하였다. New IT산업에는 무선통신융합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세부프로젝트를 그리고 융합기계부품산업에는 동력기반기계부품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강점인 의약바이오산업과 태양광산업, 이차전지와 반도체산업 등을 연계하여 디스플레이의 메카인 천안·탕정, 국가의료복합단지가 위치한 청주·오송·오창, 대덕연구단지, 과학비지니스벨트를 연계한 거대 산업지구로 도약하고자 한다.

▶ 충청권 2단계 광역선도산업 비전·목표

비전	충청 선도산업의 메가브랜드화를 통한 국가 성장동력의 신중심지 구현	
목표	IT-BT-NT-GT 기반의 선도산업 유망상품 고도화 추진	· 매출액 2조 5,000억원 · 수출액 1조 1,000억원 · 고용창출 5,000명
산업별 목표	차세대에너지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에너지변환 및 저장 부품소재의 고품위화 · 매출액 6,300억원 · 수출액 2,200억원 · 고용창출 1,360명
	의약바이오	지속성장형 메디바이오 산업 성장동력 창출 · 매출액 5,000억원 · 수출액 1,000억원 · 고용창출 600명
	New IT	New IT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스마트 디바이스 스타브랜드 창출 · 매출액 8,900억원 · 수출액 5,400억원 · 고용창출 1,950명
	융합기계부품	융합기계부품산업의 고부가가치 달성을 통한 제품 경쟁력 확보 및 융합 부품산업 생태계 완성 · 매출액 4,800억원 · 수출액 2,400억원 · 고용창출 1,090명

충청권 2단계 광역선도산업 육성전략

충청권의 2단계 광역선도산업 육성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단계 선도산업의 성공적 수행을 바탕으로 충청권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집적된 기술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선도전략산업의 기술개발 고도화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1단계 선도산업 유망상품과 연계된 R&D 발굴 및 지원으로 충청광역사업의 성과확산을 유도하며 미래성장동력산업과 주력산업의 산업발전단계 및 제품의 시장단계 분석을 통해 육성 전략을 차별화할 것이다. 미래성장동력산업의 경우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 및 협력비즈니스 발굴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주력산업의 경우 제품고도화와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현장인력 재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선도전략산업 관련 기업의 제품화 및 생산 능력 제고를 지원하고자 한다.

충청권은 'IT-BT-NT-GT 기반의 선도산업 유망상품 고도화 추진', '매출액 2조 5,000억원, 수출액 1조 1,000억원, 고용창출 5,000명'을 목표로 2단계 광역선도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먼저 중앙정부사업, 충청권 광역사업, 시·도 추진 지역사업의 위계별 정합성, 연관성 분석을 통해 연계가능성 및 연계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충청권 광역사업 및 시·도 추진 지역사업의 R&D 및 비R&D사업, 추진주체의 역할관계 분석 및 연계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도전략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내외 연계 및 전후방 연관산업의 연계·협력을 촉진하여 지역사업, 광역사업의 성과제고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충청권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역경제권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호남권 2단계 광역선도산업 추진현황 및 과제

최정은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선임연구원
choije11@korea.kr

호남권 2단계 광역선도산업 육성의 역할과 의의

정부에서는 국가산업정책과 지역의 산업육성 방향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향후 10년을 이끌어갈 지역산업 육성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신 지역산업 발전전략을 수립 중에 있다.

그동안 호남권은 농도라는 낙후된 이미지를 가졌고 국가산업정책에서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현재 지역의 낙후성과 인구 유출 등 생산요소의 심각한 부족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적 현실에서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광역선도산업 육성정책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호남권에서 추진된 지역전략산업 및 특화산업을 토대로 지역혁신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1단계 광역선도산업(2009~2012)은 타 권역 대비 많은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지역의 산업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산업여건은 지역의 미래를 담보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2단계 광역선도산업은 1단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추가함으로써 호남권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호남권 2단계 광역선도산업의 주요내용

호남권의 2단계 광역선도산업은 취약한 지역의 산업기반을 이해하고, 전국적 수준의 특화산업도 미래 산업의 트렌드, 지역의 잠재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간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미래 국가 녹색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산업으로 선정하였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이를 확대 조정하여 반영하였

으며, 그동안 지역의 중추적인 전략산업으로 육성되어 왔던 생물산업을 라이프케어산업으로 미래성장 산업군에 추가하였고, 차세대 선박분야를 그린 · 레저선박으로 친환경 수송기계 산업에 포함시켰다. 신재생에너지, 광융 · 복합 산업, 친환경 수송기계 산업의 1단계 사업은 사업의 연속성과 타 권역과의 중복성 및 지역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확대하거나 권역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프로젝트 및 유망품목을 도출하였다. 라이프케어산업이 추가되어 광역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산업의 실질적 성과제고 및 확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통합적 지역산업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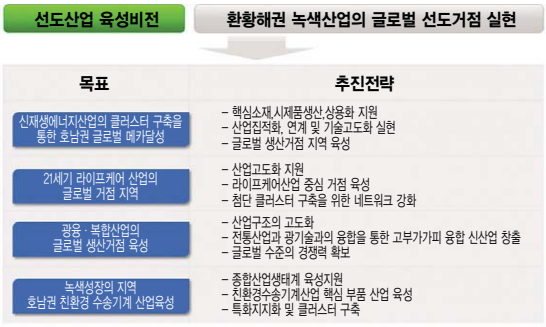
호남권의 광역선도 산업 특성을 보면, 미래산업인 녹색산업에 대한 지역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선정된 선도전략 산업들은 향후 주요 녹색산업의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호남권 광역선도산업 육성전략과 향후과제

호남권의 2단계 광역선도산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산업구조를 극복하고, 환황해권에서의 중추적 역할 그리고 미래형 산업에 집중하기 위해 "환황해권 녹색산업의 글로벌 선도거점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의 미래 산업정책방향에 맞추어 선도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호남권 광역선도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산업기반을 광역선도산업과 연계하여 주력 산업 및 뿌리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지역산업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호남권 선도산업의 비전, 목표 및 추진 전략



호남권은 2단계에서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권역내 사업주체인 시도 및 관계기관, 기업, 대학 등의 참여 확대를 통해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더욱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권역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초광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산업발전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호남권 광역선도산업 선정현황

구분	산업	프로젝트	유망품목
미래 성장 동력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소재중심)	실리콘 잉곳 · 웨이퍼소재, 결정질 태양전지 · 모듈 소재, 박막 태양전지 · 모듈 소재
		풍력 시스템 · 모듈	풍력발전단지 상용화 핵심소재부품, 풍력발전 모듈 및 시스템 개발 · 제조, 풍력발전 시스템 시험평가 엔지니어링
	라이프 케어	바이오 식품	미생물 응용식품, 웰빙 발효식품, 라이프 케어 기능성 식품
		바이오 활성소재	천연물 친환경생명소재, 바이오메디컬 활성소재, 해양바이오 소재
대표 주력 산업	광융 · 복합	광부품 및 시스템	광응용센서 및 통신시스템, 광융합부품 및 기기
		신광원 조명	일반/산업용 조명, 융 · 복합 조명
	친환경 수송기계	친환경 차량 및 부품	디젤차량용 전장부품, 디젤차량용 새시 및 차체부품, 변속 및 구동시스템, 친환경 농업용 차량부품, 전동식 보기류 및 새시부품, 충전시스템 및 전지팩 부품
		그린 · 레저 선박	중소형 선박추진 및 발전시스템, 중소형 선박 운항 · 안전관리시스템, 인간감성 및 쾌적성 향상 내외장 부품, 고속선박 부품, 레저선박 선체부품

대경권 2단계 광역선도산업 주요내용과 과제

이상준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선임연구원
sjoonee@korea.kr

지역산업 재도약을 위한 비전의 설정과 계획 수립

우리나라의 지역산업 육성정책은 1990년대 후반 당시 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진흥계획에 의한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의 지역산업 활성화 정책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외환위기 이후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하락세를 보임으로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지역산업 육성에 한계를 보였던 만큼 중앙정부에 의한 여러 지역산업 육성정책이 대구·경북지역에 큰 힘이 되어 왔다.

이번 2단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은 그간 '선도산업-전략산업-특화산업'의 틀로 진행되어 오던 지원사업의 체계가 변화되고, 지역의 산업환경도 변화함에 따라서 향후 지역산업을 이끌 수 있는 주력산업과 신성장산업에 대한 검토와 지역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비전 설정과 계획 수립을 기획하게 되었다.

기존의 대경권 주력산업인 섬유산업은 IMF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매출이 하락하였고, 모바일산업의 경우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었으며,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우에도 차세대 생산라인이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도 아직 시장화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산업이 다수인 상황에서 신성장산업이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위상 또한 동남권과의 격차가 심해지고, 충청권에 우위를 상실하는 등 타 광역권에 열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경권의 재도약을 위해 "지식경제기반의 글로벌 신성장거점 육성"을 비전으로 주력산업의 첨단화와 유망업종의 미래 성장동력화를 목표로 하였다.

대경권 2단계 선도산업과 세부프로젝트

2단계 선도산업과 관련하여 대경권은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그린에너지산업과 IT융복합산업, 대표 주력산업으로는 스마트기기부품산업과 첨단융합소재산업을 선정

하였다. 그린에너지산업은 태양광(장비중심)과 연료전지 프로젝트, IT융복합산업은 의료기기(치료/헬스케어기기중심)와 실용로봇 프로젝트, 스마트기기부품산업은 스마트자동차부품과 스마트모바일 프로젝트로 구성되어있으며 첨단융합소재산업은 첨단금속·세라믹소재와 하이테크섬유소재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미래성장동력산업은 기존의 1단계 선도산업을 그

▶ 대경권 선도산업 선정결과

대로 이어받아 수행하게 되었는데 그간 3년 내 상용화에 걸맞지 않은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바 이번 계획에서는 상용화를 고려한 유망상품의 선정을 통해 시장화 성공모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표주력산업의 경우 기존 주력산업의 위상변화를 고려하여 스마트자동차부품산업을 새로 포함하였고, 소재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각 산업간의 유기적인 동반성장의 틀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들 산업의 선정과 계획이 성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의 끊임없는 혁신 노력과 중앙정부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식기반 경쟁력 강화

세계경제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지식기반경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산업 또한 글로벌 경쟁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대경권은 주력산업의 경우 산업의 성장세 둔화로 특화발전 혹은 구조고도화를 추구해야 할 시점에 있다. 성장동력산업의 경우 시장화 진입을 못한 단계에서 기술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강대국들과의 경쟁에 처해 있고 중국 등의 후발주자들 또한 IT, 그린에너지, 바이오 등의 주요 산업군에서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기술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 하겠다. 그러나 대경권의 경우 지식기반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나 대학역량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핵심 R&D 관련 기관들은 대부분 수도권과 충청권에 밀집해 있는 상황이며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인 우수인재들마저 역내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수도권이나 충청권으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의 지역산업 육성정책은 전략산업 및 선도산업 육성,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이언스파크 형태의 성장거점개발을 통해 지원되어 왔다. 그러나 10여년간 추진해온 사이언스파크 형태의 지역성장 모델이 완전히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것은 지역기업을 지원하고 산업을 활성화시킬 핵심 R&D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해외의 핵심 사이언스파크들은 그 중심에 대학과 역량있는 연구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의 핵심 대학들이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지역산업 육성정책은 산업화단계의 R&D개발 위주의 지원정책이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쟁무대는 글로벌화되었고 지역이 세계무대에서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R&D기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다. 그러므로 향후 중앙정부의 지역산업 육성정책에서는 지역이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핵심역량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동남권 2단계 광역선도산업 육성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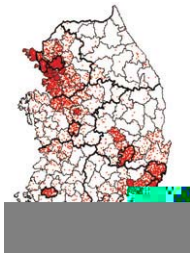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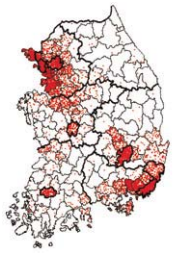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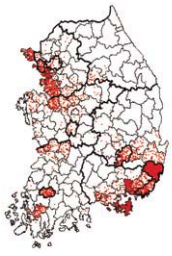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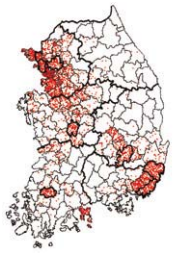
하창현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책임연구원
habak@chol.com

동남권의 산업현황

동남권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제2의 광역경제권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제조업 측면에서는 수도권보다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제조업 종사자수는 전국의 23.4%로 수도권 41.7%에 비해 매우 적지만, 생산액은 전국의 28.6%로 수도권 28.5%보다 더 많아 실질적인 국내최대의 산업집적지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동남권의 제조업 중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의 종사자수는 전국의 86.4%로 자동차, 조선관련 산업에 매우 높은 집중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C15)은 41.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은 56.3%로 경남-부산-울산지역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5% 내외로 열악한 수준이다. 생산액을 살펴보면,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89.4%,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은 56.3%,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은 40.8%로 동남권의 주요 산업적 특성이 수송기기 및 기계, 석유화학산업에 매우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규모별 분포를 보면, 300인 이상

▶ 제조업 분야별 종사자 현황

[전체 종사자수]	[기계금속산업]	[수송장비산업]	[화학산업]
			

▶ 광역권별 2011년 수출현황

광역권/시도	수출액(백만$)	비율(%)
전국	555,213,655	100.00
수도권	170,365,176	30.68
서울	56,002,512	10.09
인천	26,805,483	4.83
경기	87,557,181	15.77
충청권	76,245,605	13.73
대전	4,122,180	0.74
충북	12,169,671	2.19
충남	59,953,754	10.80
호남권	66,149,705	11.91
광주	13,339,695	2.40
전북	12,818,350	2.31
전남	39,991,660	7.20
대경권	58,500,563	10.54
대구	6,371,158	1.15
경북	52,129,405	9.39
동남권	181,848,946	32.75
부산	14,561,601	2.62
울산	101,480,083	18.28
경남	65,807,262	11.85
지역경제권	2,077,128	0.38
강원	1,977,393	0.36
제주	99,735	0.02
기타	26,532	0.00

대기업이 전국의 24.6%이고, 100인 이상 기업의 비율은 24.3%로 대체로 동남권의 제조업은 타 권역에 비해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이 많아 규모면에서 크다고 할 수 있다. 동남권은 전체 제조업뿐만 아니라 기계금속산업, 수송장비산업, 화학산업 등 주요산업에서 전국적으로 집중도가 높다.

수출현황을 보면, 동남권은 2011년 1,818.5억 달러로 전국의 32.75%에 이르러, 수도권 1,703.7억 달러, 30.68%를 크게 능가하고 있다. 특히 울산시는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많은 1,014.8억 달러로 전국의 18.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동남권의 제조업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산업지표에서 동남권은 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집적지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도 주요 산업집적지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선도산업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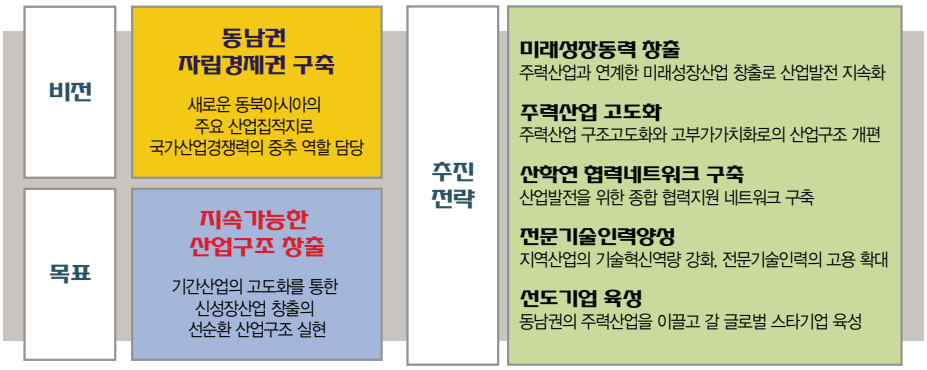
동남권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전국적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광역선도산업이 선정되었으며, 선도산업은 현재 동남권의 주요 기반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남권 3개 시도에서는 지역간에 산업적 구분이 다소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다양한 합의과정을 거쳐 2단계 선도산업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산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

▶ 동남권 광역선도산업 선정현황

미래성장동력	에너지 플랜트		그린화학소재	
	풍력부품	• 풍력핵심 기계 및 전장부품 • 풍력핵심 소재 • 풍력핵심 부품 인증 및 성능 평가 • 해상풍력 Subsea Structure(준심해용)	화학융합소재	• 2차전지 핵심소재 • 극한 환경용 소재 • 고기능성 접착소재 • 구조기능 내외장재 소재 • 고감성 표면처리 기능제어 소재
	원전설비	• 중대사고 및 재해대비 설비 • 방사선 응용 핵심 장비 • 원전용 핵심 BOP 개발(M/E BOP) • 사용후 핵연료봉 보관 및 수송용기		
대표주력산업	수송 기계		조선해양	
	지능형 기계부품	• 고효율 동력전달부품 • 동력발생공급장치 • 제어계측 및 정밀생산기기 • 지능형 그린제어기계부품	해양플랜트 기자재	• Topside시스템(상부시스템) • 유틸리티 시스템 • 심해용 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
	친환경 차량부품	• 엔진구동부품 • 구조차체부품 • 고감성 내 · 외장 부품 • 안전보호부품	그린 선박기자재	• 친환경 고효율 추진 시스템 • 연료전지 기반 선체 및 추진시스템 • 스마트 항해통신 시스템 • 스마트 계측제어 시스템 • 레저용 선박부품 • 소재
	항공	• 회전익 항공기부품 • 항공기 복합재 구조물 • 소형 항공기 친환경 추진 장치 • 항공기 탑재 소프트웨어 • 항공기 피로 치명성 구조용 부품 • 항공기 보조기기		

▶ 동남권 광역선도산업의 비전과 목표



시할 수 있었으며, 권역내 시도간 협력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정책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었다.

선도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은 수송기기 및 기계, 화학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어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동남권의 선도산업은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자동차, 조선, 항공 등의 산업을 선정하였고, 미래성장동력은 이러한 기반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으로의 다각화를 위해 도출하게 되었다.

산업별 주요 특성을 보면, 풍력부품과 원전설비는 미래 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의 기반산업인 기계부품과 연관되어 있고, 국내 최대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하고 있어 지역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화학융합소재산업은 석유화학산업을 고도화하고 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지능형 기계부품, 친환경 차량부품, 항공은 지역 특화의 대표 산업이며, 해양플랜트기자재와 그린선박기자재는 전국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이다.

동남권 선도산업 육성전략

동남권은 국내 기간산업 집적지로서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동아시아의 주요 산업집적지로서 세계와 경쟁하는 전초기지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환경을 감안하여 그에 걸맞는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동남권 광역선도산업의 비전은 "동남권 자립경제권 구축"으로 제시하며, 특히 산업적 측면에서 자족적인 경제권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 현황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창출"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는 동남권의 주력산업인 기계, 자동차, 조선, 화학 등 기존 제조업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신성장산업을 창출하여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대표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신규사업의 도출과 관련산업의 특화를 통해 신성장산업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선순환의 산업구조로 개편하는 것으로 말한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은 미래성장동력창출, 주력산업 고도화,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구축, 전문기술인력 양성, 선도기업 육성이다. 이러한 추진전략에 따라 8개 프로젝트별 사업목표를 제시하여 선도산업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도출하여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동남권은 주요 기간 산업의 집적지로서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이다. 동남권이 가지는 이러한 위상과 역할을 인식하고 동남권만의 산업경쟁력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통해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더 한층 높이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강원권 2단계 광역선도산업 육성계획

민태홍
강원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선임연구원
thmink@hanmail.net

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강원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은 지역사업의 광역화 · 대형화와 광역사업간 연계추진을 통해 지역산업의 분절적 사업추진으로 인한 성과부족을 개선하고, 선도산업과 전략산업, 특화산업 등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성과 제약을 극복하고자 한다. 또한 공급자 위주의 지원정책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여 지역기업의 R&D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현장맞춤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추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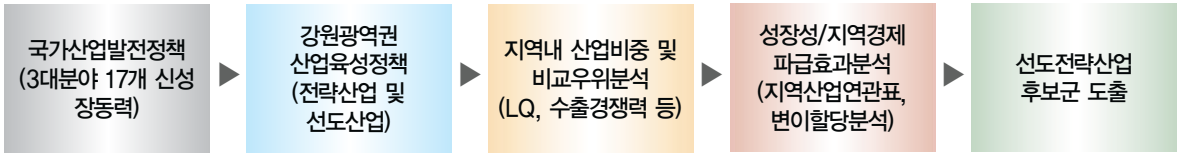
이번 계획은 지난 10년간 지역산업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10년을 견인할 성장산업 도출하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시도 전략산업간 연계를 통한 국가정책과 지역정책의 접목을 통해 지역의 미래 산업지도 역할을 하는 새로운 성장산업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선도전략산업 선정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는 지역내 산업비중은 다소 낮지만 미래성장성이 높은 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높은 성장성 시현이 예상되고, 기술혁신에 대한 집중투자로 장래 지역내 미래성장동력 확보가 가능한 산업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강원권 지하자원을 활용하여 수입의존도가 높은 원천소재 자립화와 소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품산업과 연계하여 산업별 · 제품별 Value-Chain을 완성할 수 있는 기능성신소재산업을 선정하였다.

대표주력산업으로는 지역 내 산업비중은 높으나 성장률의 둔화 · 정체 · 감소 등으로 구조고도화를 통한 지역내 기간 · 주력산업으로의 위상 유지 및 상승(Up-turn)이 필요한 산업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강원권의 전략산업 및 1단계 선도산업으로 추진하였던 바이오와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메디컬산업과 강

▶ 선도전략산업 선정방법 및 절차



원도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의료서비스를 연계한 헬스케어산업을 대주력 산업으로 선정하였다.

선도전략산업의 비전 및 목표

강원권 선도전략산업은 "동북아 생명 · 건강산업의 신발전지대 구축"을 비전으로 하여 기능성신소재산업 신발전거점 구축, 바이오메디컬산업 국가거점화 추진, 글로벌 건강 · 치유 · 휴양형 헬스케어 목적지를 목표로 고용창출 1,900명, 매출 4,600억원, 수출 1,220억원을 달성하여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기대효과

선도산업, 전략산업 관련 연관산업 부재현상을 극복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권역내 신성장동력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강원권 전역의 동반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미 FTA에 대응한 산업 경쟁력 고도화 및 질적 발전 도모를 위해 강원권 선도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및 해외시장 진출 강화 및 초광역 연계를 통한 산업 경제기반 구조 고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단계 선도산업, 전략산업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선택과 집중형 사업 추진으로 권역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동반성장을 이룩하고,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 미래 신기술융합형 산업을 육성하여 연관산업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정량적 기대효과는 강원권의 소재산업과 바이오메디컬산업, 헬스케어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켜 고용창출 1,900명, 매출 4,600억원, 수출 1,220억원을 달성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강원권 선도전략산업

산업군	선도전략산업	프로젝트 (중핵업종)	유망품목
미래성장동력산업	기능성신소재산업	세라믹비철소재부품	– 전기 · 전자세라믹스, – 기계 · 구조세라믹스 – 경량소재부품, – 비철금속 기초소재
대표주력산업	기능성신소재산업	의생명바이오	– 천연물 유래 바이오 의약품, – 단백질 치료제, – 유전자 치료제, – 바이오시밀러, – 의료소재, – 신개념 진단치료제, – 암검출용 바이오마커
		전자의료기기	– 시험 및 분석기구, – 전자기 측정 – 영상진단기기 및 단층 촬영장치 – 의료기기 부품소재, – POCT 진단기기 – 의료용 소프트웨어, – DR 영상장비
	헬스케어산업	헬스테인먼트	– 웰니스 리조트(건강관리) – 헬스투어(의료관광)

▶ 타 광역권간의 연계구조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은 1.2%인 데 비해 제주는 3.2%이고, 제주해역의 풍력자원은 고풍속 Ⅰ등급(Wind Turbine Class)을 갖추고 있다. 동 사업이 본격화되면, 사업체 25개, 고용창출 180명, 매출액 1,140억원, 수출액 15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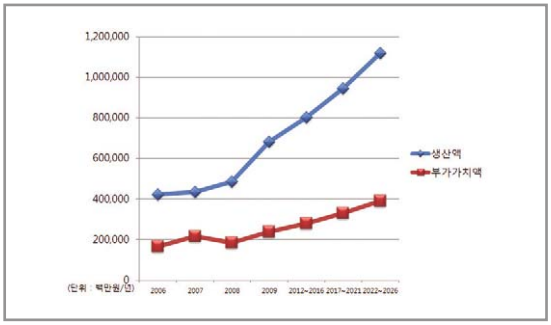
둘째, 차세대식품 융합산업은 BT · IT · NT 등의 첨단기술 및 문화관광 등 타 분야와 접목되어 내재 가치를 증폭시킬 수 있는 식품, 향장품 융합산업이다.

제주의 차세대식품 융합산업의 경쟁력은 LQ지수에서 식료품 제조업 및 음료제조업이 타 지역보다 특화되어 있고, 1인당 부가가치금액은 지역 내 타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식음료품 산업의 제주도 지역내 총생산 기여율은 2009년 11.3%로 높은 편이다.

또한 산업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첨단 바이오기술 연계 개발 · 도입 및 제주향토자원의 확산, 선도기업 육성(100억대 기업 창출) 및 중견기업 유치(관련 기업 10개사 이상 유치), 향토자원 산업화를 위한 국내 최고의 친환경자원과 세계 최고의 수자원을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출액 1,500억원, 수출액 650억원, 고용창출 2,421명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셋째, MICE 산업은 휴양형 MICE 프로젝트로 넓은 의미에서 MICE와 휴양 · 레저 · 문화 활동,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Wellness 관광, 의료관광(Medical tourism), ICT 테크니컬 투어, SMERF(Social, Military, Educational, Religious, Fraternal)등 관광활동이 결합된 제반 활동이다.

▶ 차세대식품융합산업의 생산액, 부가가치액 성장목표



제주의 MICE산업 경쟁력은 개최지 매력성, 숙박시설, 회의 · 전시 시설, 공공지원기관 등 기반시설이 양호하다. 글로벌 비즈니스 콘텐츠 컨벤션 · 전시회 등 제주대표 MICE 행사 발굴 및 육성, 제주형 웰니스(Wellness) MICE 상품 개발 및 판매, 지역전략산업과의 융복합화, 휴양형 SMERF 행사 발굴 및 판매 · 해외시장 확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용창출 200명, 매출액 3,220억원, 수출액 1,296억원, UIA 세계 25위 진입, MICE 행사 375건 유치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끝으로, 제주의 미래 산업생태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광역경제권 2단계 선도산업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해 향후 경쟁력 있는 청정 제조업 육성에 큰 힘이 될 것이며,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육성과 정규직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아울러 광역경제권사업의 정책적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인지도 · 공감대를 높이는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휴양형 MICE 사업화 프로세스

여수세계박람회와 지역발전

인터뷰 interview

강동석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장과의 인터뷰

오는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개막하는 여수세계박람회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창 막바지 작업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강동석 위원장과 여수세계박람회와 지역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지난 2월 29일 오후 공사장으로 둘러싸인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강동석 위원장은 1965년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생활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2002년 한국전력공사 사장, 2003년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역임하면서 조직장악력과 추진력 그리고 현장주의를 바탕으로 인구에 회자되는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2009년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부임한 후 3년째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열정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대전에 이어 한국에서 열리는 두 번째 박람회로서 우선 개최의의와 박람회의 성공을 위한 운영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수엑스포는 '88서울올림픽, 2002월드컵, '93대전엑스포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 행사입니다. 여수엑스포는 국제사회가 기후 변화, 육상 자원 고갈로 인한 위기를 절감하고, 생명의 근원인 해양과 연안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엑스포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 해양 과학 선진국 도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운영 측면에서 성공 전략은 '콘텐츠와 사람 중심의 박람회'를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건물 · 기술 중심의 박람회에서 탈피하고, 눈으로 보는 요소보다 오감으로 체험하고 감동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배가시켰습니다. 특히 최신 IT기술을 활용해,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입장권을 예매하고 전시관까지 예약할 수 있도록 관람객들을 배려했습니다. 대형 축제의 관행이랄 수 있는 맛 없고 비싼 음식문화에서 탈피하기 위해 식음료 서비스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관람객이 주역이 되는 박람회, 관람객 한 분 한 분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휴먼 엑스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최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접근성 및 숙박문제를 많이 지적하는데 해결안은 마련되었는지요?

교통 · 숙박은 전시, 공연 콘텐츠 못지않게 세심하게 준비해온 분야입니다. 우선 지난해 개통된 순천~완주고속도로, 전라선 KTX에 이어, 목포~광양고속도로, 한중일 해상크루즈, 임시 항공편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이 속속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항'이라는 여객선터미널과 승용차 5,000대를 수용하는 공용주차장도 마련하였습니

다. KTX로 서울에서 2시간 57분이면 엑스포역에 도착, 엑스포역에서 5분이면 크루즈터미널에 도착, 20분이면 남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SOC구축으로 수도권에서 남해로의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여수시 외곽에서 박람회장까지인데, 이는 환승주차장과 셔틀버스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 외곽에서 박람회장까지 오는 주요 도로 상의 승용차는 최대한 환승주차장으로 유도하고 박람회장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일일 최대 900여대까지 수시 운행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10분 미만이어서 관람객들이 오히려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여수 시내로만 보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숙박권역을 여수 인근 2시간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2시간 권역 내 숙박시설은 하루 13만6천여실로, 관람객이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5월 주말에도 충분합니다. 부산의 경우 일본관광객이 부산에 호텔을 정하고 리무진이나 연안 선박으로 엑스포를 구경하고 부산으로 돌아가는 여행상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는 인정박람회로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바다와 해양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기존 다른 나라에서 개최되었던 엑스포와의 차별화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여수엑스포는 우선 바다를 박람회장으로 삼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포르투갈 리스본, 스페인 사라고사 등 바다를 주제로 한 박람회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바다 자체를 박람회장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람회 사이트 전역이 바다를 끼고 있으며 오동도까지 해변산책로와 전시 공간이 이어집니다. 주제관과 공연무대도 모두 바다 위에 있으며, 매일 90회에 달하는 참여형 문화예술행사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시관에서는 바다와 관련한 모든 요소들을 만날 수 있는데 주제관에서는 듀공과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 바다와 유대감을 느끼고, 기후환경관에서는 만년설이 해빙돼 무너지는 지구 멸망 5분 전 상황을 실감나게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5대양 6대주의 300여종 해양생물이 모이는 아쿠아리움과 오동도 인근에 조성되는 바다숲, 연안 어선은 해양생태계와 어업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것입니다.

해양산업기술관에서는 육지자원 고갈이라는 인류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해양자원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심해저 광물자원과 해조류에서 미래에너지, 신소재, 식량, 신약 등을 얻는 과정을 입체 영상과 퍼포먼스로 보여 줄 것입니다.

이외에도 온라인전기버스(에너지파크), 수소연료전지 도입(한국관)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시설들도 최초로 선보이며, FAO(세계식량기구), OECD 등 국제기구 학술행사와 참가국들이 지지하는 '여수선언' 등을 통해 해양의 보존과 지혜로운 이용에 관한 국제적 공감대도 형성할 계획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가 여수 및 남해안 지역발전에 미치는 경제 · 사회적 영향을 예측하신다면?

여수세계박람회는 선진국 반열로 발돋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올림픽은 보름, 월드컵은 1달 동안 열리는 반면 엑스포는 3개월 이상 개최되고, 10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개최 기간이 긴 만큼 실질적인 경제 효과도 월등히 높아 생산유발 12.2조, 부가가치 5.7조, 고용창출 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중 40% 이상이 전남지역에서 발생하며(생산유발 기준 5조 1,532억), 또 내외국인 관광객 소비지출 예상 규모는 전체 1조 2,400억 중 70% 이상이 전남 등 남해안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 효과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개발이 지연돼 왔던 남해안 지역에 엑스포가 획기적인 발전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여수엑스포는 남해안 선벨트 중 남중권의 핵심 사업으로 남해안 일대가 수도권에 대응한 새로운 국토성장 발전축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남해안은 다도해 개발과 연계돼 세계적인 해양관광 레저벨트로 거듭날 것인데, 특히 동북아 지역에는 유명한 해양 관광도시가 없어 여수와 남해안 일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엑스포 때 찾아와보니 교통도 좋고 음식 맛도 있고 관광비용도 적절하다 하면 입소문이 나서 그 관광객들이 계속 찾게 되고 그러면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 등 대규모 행사가 개최된 후 그 시설의 사후활용과 관리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는데 여수엑스포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솔직히 엑스포 기간 동안의 엑스포는 크게 수익성을 고려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성을 고려한다면 입장료를 2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1인당 평균 2만원을 받습니다. 엑스포가 끝난 후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수준의 운영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수입으로 해서 재산을 맞출 수 있는 수익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여수 엑스포 건물의 사후활용은 절반 정도 됩니다. 제가 위원장 자리를 맡았을 때는 이미 설계가 끝난 상태였고 많은 전시용건물이 영구용 건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대전엑스포 역시 그랬으나 거의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국제관은 연면적이 4만평에 달하고 이는 코엑스의 3배에 달합니다. 서울에서도 그렇게 큰 건물은 용도에 제한이 있을텐데 여수에서는 그 수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엑스포 3개월을 위해 이런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임시용으로 건축하려고 했으나 이미 현상공모 설계가 나가 있는 상태라 반발이 심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몇 가지 부수적인 건물만 임시건물화 하였습니다. 설계, 시공, 운영관리, 철거까지 패키지로 시공사가 책임지는 내용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 외 건물도 설계과정에서 필요 없을 경우 일부 철거 가능하도록 하였고 내부의 용도도 새로운 용도로 변화가능하도록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3개월간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 못지않게 사후활용을 잘하는 것도 성공적인 박람회의 기본요건입니다. 엑스포가 끝난 후 여수 신항 일대는 아시아권에서 제일가는 해양관광 리조트의 여건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엑스포의 핵심 콘텐츠와 아름다운 오동도, 크루즈터미널과 KTX여수역까지 볼거리와 편의시설, 교통망까지 모두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십분 이용하기 위하여 해양레저관광 위주로 콘텐츠를 짰습니다. 이는 박람회

3개월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박람회 이후 5~30년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시설배치,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시관 자체는 우선 박람회 3개월을 치러야 하므로 그런 전략 하에서 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건물은 국제관, 주제관, 한국관 3개밖에 없습니다.

엑스포장은 기본적으로 해양 레저 스포츠 용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종합 리조트가 돼야 합니다. 바다에는 각국의 최신 요트를 전시해 실제 구매자들이 와서 시승할 수 있도록 하고, 육상에는 옥외 전시장과 쇼핑몰을 들여올 것입니다. 해양 레저 스포츠 장비와 요트 등을 판매하는 해양 레저 복합 쇼핑몰은 중국시장을 겨냥하여 연면적 4만평에 달하는 국제관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박람회가 끝나도 핵심적인 볼거리는 남아서 관광객들에게 큰 감흥을 줄 것입니다. 계획 단계부터 전시관 등 하드웨어보다 문화예술행사, 엑스포 디지털 갤러리, 전시물 등의 콘텐츠를 남기는 방향으로 설계했습니다. 활용 가능한 필수 시설과 용도가 확보된 시설만 영구 건물로 건축하고 이외의 시설은 임시 건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핵심 콘텐츠 중에는 박람회장 내의 특화시설인 빅오(Big-O)에서 펼쳐지는 현란한 멀티미디어쇼와 바다분수, 움직이는 영상관인 엑스포 디지털 갤러리, 지상 최대의 옥외 파이프오르간인 스카이타워, 희귀 바다생물이 있는 국내 최대의 아쿠아리움, 조형미가 뛰어난 해상 건축물인 주제관 등이 있습니다. 아쿠아리움은 관광객을 모으는 데 지속적으로 좋은 역할을 하는 시설이 될 것입니다. 5월에 오픈하면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수용되는 바다생물도 가장 좋고 다양한 생물들이 모인 여수의 관광 1호가 될 것입니다. 그밖에 지중해 요리 등 세계 각국의 씨푸드 레스토랑도 유치하게 돼 각국의 미각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계간지 '지역과 발전'의 주 독자층은 중앙 및 지방공무원과 지역발전 관련 전문가들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세요.

총선과 대선 사이에 끼어 매우 어려운 시기에 개최되는 여수엑스포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엑스포의 주제는 해양입니다. 우리 국민은 오랫동안 대륙 문화의 영향으로 바다를 소홀히 해 왔습니다. 최근 영국의 BBC방송에서 100년 후인 2112년 지구상 100억의 인구를 먹여 살릴 식량자원, 에너지자원, 광물자원 등을 바다에서 구할 수 있다는 미래학자들의 100% 확실한 전망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국토가 21세기에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과 지역의 발전 전문가, 특히 관련 공직자들께서는 올해 여수엑스포를 관람하지 않으면 앞으로 30여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만한 국제행사를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꼭 엑스포장에 오셔서 바다와 연안의 보전과 지혜로운 이용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주
도시 및 지역계획연구원 원장
yjoohahn@gmail.com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발전방향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개요

지역의 침체된 전통시장에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어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부터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문전성시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덤, 흥, 정으로 대변되는 전통시장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살려 소통의 공간으로서 전통시장을 살리는 새로운 전통시장 활성화 모델이다.

수원의 못골시장부터 부산의 부전시장까지 총 21개 시장을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며, 11년까지 총 98억원의 사업비(국비)가 투자되었다. 3년 지원을 원칙(도입기 1년, 정착기 1년, 확산기 1년)으로 하며 문화기획 · 건축 · 지역개발 · 커뮤니티 · 스토리텔링 · 마케팅 · 현장경험 · 문화상인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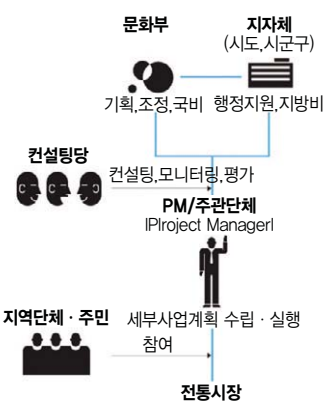
생활권 인근에 소재한 시장으로 역사 · 지역 · 문화 · 관광적 특성이 있는 시장이 지원대상이며 시 · 도에서 전통시장+사업시행주체(PM)+예비사업계획을 추천하면 문화부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시장여건, 지역문화자원의 잠재력, 예비계획의 타당성, 정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게 된다. 사업은 사업시행주체(PM: Project Manager)가 세부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업무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컨설팅, 성과평가 등을 실시한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유형

문화체육관광부는 유형별로 지원전략을 달리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공동체형, 지역관광형, 문화예술형, 문화복지형 등으로 활성화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시장별로 시장의 여건, 지역 조건, 인력자원 수준, 상인(회)의 결속력 및 기획력, PM(Program Manager)의 전문성 등 시장의 다양한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활성화 유형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민공동체형은 상인과 지역주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전통시장을 교류와 소통의 공간으로 활성화하는 유형이다.

▶ 문전성시 사업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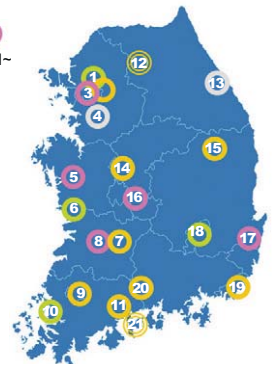


▶ 문전성시 지원시장 현황, 2011년 현재

문전성시 시장 연도별 추진상황

2 2008~2010 4 2009~2011 8 2 2010~ 5 2011~

1. 서울 강북구 수유마을시장
2. 서울 중랑구 우림시장
3. 서울 금천구 남문시장
4. 경기 수원시 못골시장
5. 충남 홍성군 홍성전통시장
6. 충남 서천군 한산오일장
7. 전북 진안군 진안시장
8. 전북 전주시 남부시장
9. 광주 남구 무등시장
10. 전남 목포시 자유시장
11. 전남 순천시 순천웃장
12. 강원 춘천시 춘천중앙시장
13. 강원 강릉시 주문진시장
14. 충북 청주시 가경터미널시장
15. 경북 봉화군 봉화상설시장
16. 충북 옥천군 옥천오일장
17. 경북 경주시 불국장-외동장
18. 대구 중구 방천시장
19.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
20.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21. 전남 여수시 교동시장



수원 못골시장은 상인 DJ가 직접 운영하는 '못골 온에어' 라디오방송, 여성상인들로 구성된 '줌마 불평합창단' 등으로 작은 골목시장에서 '이야기가 있는 시장'으로 변신하였다. 또한 강북구 수유마을시장의 '수유마을시장 작은도서관'과 '마을목공교실'은 시장 내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지역관광형은 시장의 역사적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전통시장을 관광자원화하여 활성화하는 유형이다. 한산오일장은 한산의 특산물 '모시'를 기반으로 마을이야기에 대한 조사를 통해 테마가 있는 전통시장으로의 이미지 구축에 성공하였다.

문화예술형은 상인과 지역예술가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문화시장 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역의 거점으로서 전통시장을 문화공간화하는 전략이다. 대구 방천시장은 가수 김광석을 소재로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복지형은 서민층과 영세 상인의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상인 문화예술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시장상인의 태도 변화에 주력하는 유형이다.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성과와 과제

시장에 대한 지원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꾼 문전성시 프로젝트는 전통시장을 돈과 물자가 거래되는 곳에서 '정'과 '흥'이 교류하는 공간으로 재인식하게 하였다. 즉 전통시장의 가치에 대해 재평가하고 일상의 문화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선도사업이라 할 수 있다.

문전성시 프로젝트가 진행된 시장의 총 매출액이 평균 12.8% 증가하고, 순 생산파급효과가 지원액 대비 약 3.4배, 취업파급효과는 약 346명으로 경제적으로도 가시적인 정책성과를 보이고 있다(2010, 문전성시 프로젝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하지만 문전성시 프로젝트는 시범사업으로 성공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모든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업성과의 확산, 지역문화역량 강화 등의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장상인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문화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의 자생적 발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이 품고 있는 보물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를 통해 지역 활성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발전방향

2012년은 문전성시 프로젝트에 중요한 변화의 시기이다. 그동안의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지역에 확산하는 작업을 하는 한편, 사업종료 시장의 성과 지속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효과적인 사업계획 수립

▶ 못골시장 줌마불평 합창단

▶ 한산테마장을 즐기는 아이들

▶ 수유마을시장 마을목공교실

▶ 대구 방천시장 공공미술 프로젝트

을 위해 운영했던 컨설팅단 체제를 효율적인 성과 정리 및 확산을 위한 실행조직인 '문전성시 사업단'으로 재구성하였다. '문전성시'라는 문화를 통한 활성화 사업의 브랜드화, 프로그램 및 인력DB 구축, 문전성시 시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문화시장 모델 확산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재생이라는 큰 화두 아래, '전통시장'이라는 지역 내 공간에 문화를 입히는 작업을 '지역'이라는 더 넓은 영역으로 넓혀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문전성시 사업을 통해 총 75명의 문화인력이 양성·배출되었고, 총 330개의 각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시스템 정립 등이 이루어져 왔다.

지역의 공간이 가진 본연의 가치와 역사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그 공간을 활성화하는 축적된 노하우를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거리', '마을' 등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앞으로 지역활성화에 '문화'의 중요성을 부각하여 문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 되는데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성과가 마중물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문화 주무부처로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및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성공모델 발굴·지원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등을 통해 문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정책에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김수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학과 사무관
msshkim@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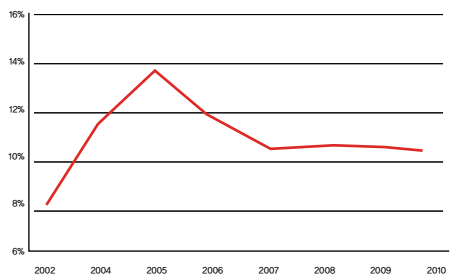
다문화가족 지원, 미래를 대비한 가장 확실한 투자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필요성

2011년 여름 런던 토트넘에서 시작하여 영국 전역으로 확산된 이민자 폭동은 우리나라 국민이나 정책당국자에게도 위기의식을 갖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의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미래의 일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2011년 기준 211,458명으로 이들 중 89%인 188,580명이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입국한 여성 결혼이민자이다.

▶ 국제결혼 비율



오른편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국제결혼은 2000년대 초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5년 이후 점차 둔화되어 2010년에는 전체 혼인건수(326천건)의 약 10%인 34천건이 외국인과의 혼인이다. 국제결혼은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화 및 결혼연령인구의 성비불균형 등의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은 우리사회에서 보편적인 가족의 형태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이민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명암이 교차하고 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완화하고, 다문화적 감수성과 이중언어 구사능력을 갖춘 인재집단의 육성과 활용이 용이하며, 이는 사회문화의 다양성으로 이민국가인 미국과 같이 사회의 활력과 역동성을 담보할 수 있다.

반면, 다문화가족은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 다문화가구의 59.7%가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이고,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도 21.3%에 달하는 등 저소득층의 증가로 인한 복지비용 증가 및 가족안전망 약화가 우려된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는 다문화가족 특히,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한 고립과 소외로 이어져 사회 · 문화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빈곤층의 증가, 인종 · 계층간 갈등에 따른 사회불안 증가 등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 방향 및 추진체계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을 직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6년 처음으로 12개 관련부처가 참여하여 '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마련하였고 여성가족부에서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자칫 정책간 충돌과 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여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

한편, 다문화가족은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또한 매우 중요하다.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가족단위 삶을 영위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조기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에서 다문화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다.

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현황과 역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6년 21개 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2012년 현재 201개의 센터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은 전체 다문화가족의 25% 수준으로 이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대상별로 분류하면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수요자의 욕구와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이용자가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로는 한국어교육이 있다. 결혼이민자 중 초기입국자의 경우 언어장벽으로 인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어 교육의 경우 기초에서 고급과정까지 전문 한국어 교사에 의해 지도가 이루어지고 결혼이민자가 원할 경우 방문교육도 가능하다. 이밖에 가족생활, 사회생활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번역 서비스의 제공, 한국사회 이해를 돕는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부부나 배우자·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통합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부모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부모교육서비스는 임신에서 출산, 아동 양육의 전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과 자녀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족을 형성하고 보살피는 등의 경험이 없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매우 필요한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자녀생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언어영재교실이 대표적인 서비스다. 자녀생활서비스는 직접 다문화가족 아동의 생활을 보살피는 서비스로서 유아기에서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성 발달, 정체성 확립 등 정서적 분야의 지원뿐만 아니라 숙제지도, 독서지도 등 인지영역 발달과 기본생활습관 형성 지도 등 대상아동 생활전반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서비스는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행사

▶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한국어 발달이 뒤처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언어 발달정도를 측정하고 전문 언어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언어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서비스이다. 언어영재교실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엄마(아빠) 나라말 배우기를 통해 가족간 유대를 강화하고 이중언어 습득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대다수 다문화가족이 저소득층으로 머물러 있음에 따라 결혼이민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취업준비를 위한 직업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내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직업훈련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일부 센터에서는 결혼이민여성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을 창업하여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통·번역사, 언어영재교실의 이중언어 강사들은 결혼이민 여성들의 전문성 활용 및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결혼 이민자를 채용하고 있는데 현재 388명의 결혼이민자들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채용되어 활약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 향후 과제

우리나라의 다문화 지원정책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고 정책의 추진체계가 마련되었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고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도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비스 사각지대가 존재하는가 하면, 부처간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사업중복의 문제, 선심성·일회성 행사중심의 사업추진으로 정책의 일관성 상실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일반 국민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다문화가족 또한 여느 가족과 마찬가지로 이혼이나 사별 등을 통해 다양한 가족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향후 몇 년 지나지 않아 현재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이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맞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사회는 현재까지 직면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가족이 이질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에 부담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활력을 주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자원의 보고(寶庫)가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중·장기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문화가족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정책상황을 반영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에 있으며,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완료할 예정이다.

박선옥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행정사무관

eloph@korea.kr

중앙과 지역이 함께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왜 필요한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은 새삼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미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 있다. 이는 국민들이 정부에 기대하는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다. 그간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상당부분 결실을 맺고 있고 있기도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또는 획일적인 정책만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일자리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면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200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그 핵심적인 사업이다.

「패션의 메카 동대문시장을 이끌 봉제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창출(서울특별시)」, 「향토 자원인 편백나무를 활용, 아토피 치유 및 재활 관련 일자리 창출(전남 장흥군)」, 「안동, 경주 지역의 전통 문화를 일자리로 연계한 문화적 일자리창출(경상북도)」. 이 사업들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새로운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각 지역의 고용여건이 다르다면 그에 맞춰 일자리대책도 달리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 점에 착안한 사업이 바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다. 지역의 자치단체와 고용부 고용센터를 필두로 노동계, 사용자단체, 사회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 지역민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새롭게 생성된 일자리에 취업시켜 지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존재 이유이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종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공모방식에 따라 시도간 경쟁사업과 시도내 경쟁사업으로 나뉜다. 시도간 경쟁사업은 광역자치단체간의 경쟁방식으로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공모 ·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며, 시도내 경쟁사업은 광역자치단체 내의 기초자치단체간의 경쟁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사업내용에 따라 포럼사업, 연구사업, 특화사업, 패키지사업으로 나뉜다. 포럼사업은 지역내 고용 관련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지역의 고용이슈를 발굴 및 공론화시키고 지역민의 고용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연구사업은 지역차원의 고용문제에 대한 실태분석과 대안제시 등을 위한 지역별 연구사업이다. 특화사업은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다.

패키지사업은 특화사업과 연구사업이나 포럼사업이 결합된 사업이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가, 컨설팅, 교육, 정보지 발간, 정보네트워크 운영 등을 지원하는 지역고용 인프라확충사업이 있다.

7년차를 맞이한 사업의 성과와 한계는?

2006년부터 실시해 온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이제 7년차를 맞이하였다. 그간 본 사업이 얻은 성과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지역특성에 기반을 둔 다양한 지역밀착형 사업 발굴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주도 고용·인적자원개발 정책으로는 착안하기 힘든 지역밀착형 사업이 발굴되어 지역 고용문제 해소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둘째,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과 능력개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고용관련 주체와 전문가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해 온 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의 고용관련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로 지역 고용·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 여론 형성에 기여하였으며, 자치단체의 연계활동도 강화해 왔다. 셋째, 지역 고용주체들의 사업수행 역량 향상을 들 수 있다. 중앙에서 지침을 받아 수동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에서 직접 필요한 사업을 구상하고 운영하는 능력을 배양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지역에서 고용창출과 인적자원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이 제한되어 있고, 지역의 고용여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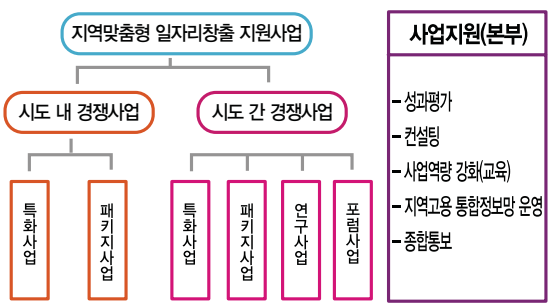
2012년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2012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일자리공시제와의 연계강화이다. 지역 일자리공시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 인센티브 차원에서 별도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지역고용포럼의 역할 강화이다. 광역 자치단체별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지역고용포럼을 상호 교류의 장으로 운영하여 지역내 고용 이슈를 공유하여 지역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셋째,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 공모 시기를 앞당겼다. '11년도 말 공모를 실시하여 '12년 1월에 선정 및 약정체결 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개선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2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236개 선정하였으며 이 사업들을 통해 약 9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특성을 살린 일자리창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여 지역이 안고 있는 고용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특히 지역 일자리공시제와 연계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사업을 키워 나가고자 한다.

▶ 사업구조도



장영철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 주무관
yczang@nate.com

도농교류협력사업

도농교류사업이란 ?

도농교류사업이란 "도시인에게는 휴식과 휴양을 제공하고 농어민에게는 소득을 주는 사업"이다. 즉, 도시인과 농어민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책을 집행하고 산하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도농교류사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WTO, DDA, FTA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의 농수산물시장이 세계에 개방됨으로써 각국의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과 경쟁하게 되어 자연히 농수산물가격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농어촌의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농어촌의 활력이 떨어지게 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어촌 산업구조를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농어촌관광분야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울러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통하여 농수산물직거래와 농어촌체험휴양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되찾는 있는 정책방안이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의 다양성

도농교류사업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 소비자(도시민)에 대한 홍보, 소비자 지원 촉진으로 구성되며, 각 유형 하부에 많은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면 체험휴양마을 육성을 위하여 보험지원, 마을운영에 대한 세무 및 마케팅 등 종합자문과 2년 주기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운영자(마을대표 및 사무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도시민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매년 서울에서 여름휴가페스티벌(2012년 일산 킨텍스 6.28~7.1예정)을 개최하고, 상시 On-Line 홍보를 위하여 웰촌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 지원 촉진을 위하여 농어촌의 미래고객에 대한 농어촌유학 지원, 팜스쿨 지원, 외국인에게 홍보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Rural-20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농교류 협력사업(공모)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 농어촌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다양한 도농교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본 사업이 이제 시작단계인 관계로 예산의 규모가 작다는 아쉬움이 있다.

도농교류협력사업은 여러 도농교류사업 중 하나의 분야이다. 도농교류협력사업은 여타 도농교류사업과 달리 역사가 긴 편이다. 즉 농어촌의 활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99년 농업인, 소비자, 정부가 합심하여 "농소정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2008년에 현재의 도농교류

협력사업으로 명칭이 변경었다. 또한, 사업추진 방식도 공모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시행주체도 농협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바뀌게 되었다.

도농교류협력사업의 추진현황

도농교류협력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된다. 전년도 말에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당해연도 1월경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 제출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검토하여 승인하고 사업시행 공고를 하게 된다. 사업시행 공고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웰촌포털에 동시에 게시되며, 비영리 민간단체와 우수체험마을 및 도시 초등학교는 도농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면서 공모하게 된다.

심사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매년 평균 16억원 내외) 내에서 각 단체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특·광역시 소재 초등학교에 배정된다.

배정된 예산은 연중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연도 말에 집행된 내역을 정산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함으로써 완료된다.

도농교류협력사업의 추진성과

연도별 추진현황 및 정량적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농교류협력사업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13년간 시행되었고 최근 5년간 추진 성과는 도농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횟수는 평균 1,057회, 도농교류 참여인원은 평균 13만3천명 수준이다. 신청대비 선정된 평균 단체수 비율은 47.1%이며, 참여 단체당 평균사업비는 45백만원 수준으로 지원되었다. 총 488개 단체가 신청하여 230개 단체를 선정(평균 45개 단체)·지원(47.1%)하였다.

정성적인 효과로는 첫째, 도시소비자와 농어업인 간의 유대관계강화 및 도시민의 휴양·휴식 욕구 충족이다. 둘째, 농어촌체험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를 통하여 우리농산물에 대한 신뢰감 구축과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가치 인식에 기여하였다. 셋째, 민간단체, 도시민, 농어업인의 교류와 농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도농교류협력사업의 향후 추진과제

본 사업은 도시 소비자에게 농어업·농어촌의 현실을 이해시키고 도시와 농어촌이 하나라는 공감대와 유대 강화를 위해 농어민, 소비자 및 정부가 함께 하는 사업이다. 향후 도농교류의 촉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예산확보와 확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매년 사업효과 분석과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정책당국이나 국회 예산확보 시 정부예산이 투자될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증명해야할 것이다.

FTA 확대 등으로 우리의 농산물이 세계의 농산물과 경쟁함으로써 감수할 수밖에 없는 농수산물 가격 인하와 그로 인한 농어업 소득의 감소를 도농교류라는 농어촌관광(3차 산업)을 농어촌에 도입함으로써 소득향상과 아울러 농어촌의 활력을 찾아 주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와 정책을 대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변할 수 없는 사명이며 목표가 될 것이다. 이것이 도농교류사업이 일회성의 정책이 아니라 지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논거이다.

▶ 연도별 예산 및 참여인원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합계	평균
참여횟수	1,490	1,024	931	901	940	5,286	1,057
참여인원(천명)	188	210	118	76	73	665	133
사업예산(백만원)	1,645	1,950	1,625	1,600	1,608	8,428	1,686

문대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도농교류2팀장
dgmoon@ekr.or.kr

진도군 도서종합개발사업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연계 협력

진도군에는 도서종합개발사업 대상도서 33개 중 26개 도서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632,563㎢) 내에 위치하고 있다. 때문에 자연공원법에 의해 해당 지역의 개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연공원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 살고 있는 정주민들의 편의시설 하나 지으려 해도 제한이 따랐다.

이런 걸림돌을 효율적으로 타개한 것이 '관매도 명품마을 조성사업'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품마을 조성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진도군의 도서개발종합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명품마을 조성사업'은 국립공원 특성상 산간오지, 도서 등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립공원 내 마을을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마을로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제1호로 선정된 곳이 바로 진도군 관매도이다. 진도군의 섬을 개발하여 살기 좋은 섬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진도군과 국립공원 내 마을을 보호하면서도 새로운 마을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하나의 접점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양 측은 상호 연계를 통한 개발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향후 시설물 관리 일원화 협정을 체결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진도군은 필요한 시설을 적합하게 지어주고 유지·관리·보수를 국립공원 측이 맡는다는 것이 기본 틀이다.

환경파괴를 줄인 개발

시행과정에서의 갖가지 협의 과정도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환경을 보호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국립공원 측은 환경파괴가 덜한 재료를 사용하여 시설을 짓고자 했는데 그렇게 되면 유지 보수가 쉽지 않게 된다. 경험상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진도군은 재료를 혼합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식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렇게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양 측이 만족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다. 지자체 위주의 개발 사업이 환경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예전부터 염려되었던 부분이었다. 그러나 '관매도 명품마을 조성사업'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협의·협력을 통해 이런 염려를 불식시켰다. 사업 진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파괴를 최소화시키면서 환경과 어우러지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개발 사업에 중요한 모델이 되었다.

한편 진도군 조도면 일대의 20가구 이상 마을과 농경지가 위치한 일부 지역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환경부 국립공원 계획변경 심의위원회에 의해 통과되었다.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원지역에서 해제한 것이다. 또 20가구 미만 마을과 농경지는 자연환경지구에서 마을지구로 확대 지정되었다. 육상 63㎢, 해상 569㎢ 가운데 해제된 육상 면적은 약 6㎢로 전체의 10%가 넘는다. 이로써 진도군의 도서개발종합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주민 우선의 상향식 계획 수립

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섬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안다. 지역 공무원이라 해도 도서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섬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정주기반 조성이 중심인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주민들의 어업생산을 돕기 위해 접안시설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안도로를 정비하거나 주거시설을 보완하여 주민들이 먼저 살기 편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우선이다.

그 다음이 섬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다. 관광객 유치는 섬에 사는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직결되어 있다. 해양자원을 이용한 관광자원 개발과 환경정비,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교통편 개발 등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섬을 찾는 사람들을 다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섬 관광이 많아지던 초기에는 관광객들이 왔다가면 섬에는 쓰레기로 넘쳐났다. 그 뒤처리를 모두 섬사람들과 공무원들이 감당해야 했다.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섬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생겼다. 담당 공무원들은 관광객 유치로 인해 소득이 향상되고 생활여건이 개선되면 주민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발에 대한 이점에 대해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이도현상을 막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진도는 계속 업그레이드 중

관매도의 인기와 더불어 2010년에도 진행된 도서개발종합사업으로 진도군의 여러 섬들은 한층 활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진도군의 도서개발에서 가장 뒤처진 것은 교통편이다. 동남해권에 비해 진도군과 다도해상은 유람선조차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다. 유람할 수 있는 여건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것이다. 현재까지도 섬을 왕래하는 교통편은 쾌속선이 아니라 몇 대 되지 않는 도선(차나 물건을 싣는 배)이다. 관매도의 경우 관광객들이 1시간 넘게 배를 타야 한다. 빠르지도 않은데다 인원제한까지 있어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다. 여름 성수기에는 배편을 늘리지만 그래도 부족하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늘어난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진도군은 이전과는 다른 각오로 사업에 임하고 있다. 서망항과 팽목항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마리나 시설과 크루즈 시설 확충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 같은 시설이 확충되면 관매도권과 하조도권의 개발 전망은 아주 밝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열의를 보이고 있다.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70개의 성장촉진지역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하는 진도군이 효율적인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섬에 사는 사람들도, 섬을 찾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자는 진도군의 바램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 눈부시게 변할 진도군을 기대해 본다.

조경수
진도군청 수산지원과 담당자
jooksoo@korea.kr

클린하우스, 청정제주의 디딤돌!

'쓰레기' 의 어원은 영어 slag(슬래그 : 광석을 용해할 때 생기는 찌꺼기, 녹은 쇠찌끼)와 slaggy(슬러지 : 하수처리 또는 정수과정에서 생긴 침전물. 오니(汚泥)라고도 함)에서 온 말이라고 한다.

옛 선인들은 인간생활의 3대 요소인 의식주(衣食住)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일상을 자연과 함께 하였고 쓰고 남은 것은 자연으로 되돌릴 수 있었으므로 생활 쓰레기가 거의 없었다. 예를 들어 옷이나 신발(짚신)도 낡으면 땔감으로 사용했고, 먹다 남은 음식물은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집은 나무와 돌, 흙 등으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해서 조선시대 말기까지만 해도 쓰레기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쓰레기' 라는 말은 근대화 이후 서양문물과 함께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비닐, 나일론, 플라스틱 등을 사용하면서 생겼다고 한다.

제주시의 쓰레기 처리실태를 살펴보면, 19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한 이후 쓰레기 배출량 감소 및 재활용품 분리량의 증가를 가져 왔다. 그러나 집 앞 또는 근처 공터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으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비효율적인 수거체제로 인한 민원빈발, 과다한 예산소모 등의 행정적 낭비가 초래되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2004~2005년 1년 동안 시책결정, 모형공고, 디자인 실시 설계 등을 걸쳐 쓰레기정책의 일대 혁신인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클린하우스제도' 를 시행하게 되었다. 클린하우스는 일정한 장소에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을 분리수거할 수 있는 바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자동상 · 하차식 차량으로 수거 · 처리하는 선진 거점 수거방법을 말한다.

클린하우스를 국내 최초로 추진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은 시민들이 갖고 있는 종전 쓰레기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 때문에 생긴 님비현상이다. 시민들이 클린하우스제도는 찬성하지만 자기 집 앞에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여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역여론 지도층을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 당위성 등을 설명하여 현재까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

예산투입 현황 및 계획을 보면 제주시 26개 읍 · 면 · 동에 2005~2012년까지 153억원을 투입하여 2,200여개소에 대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제주시 클린하우스 사업 실행 모습

제주시에서 매년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클린하우스 설치에 대한 만족도는 93% 이상으로 나타나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났는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악취 등 냄새(48%), 쓰레기 넘침(22%), 주변 불결(14%),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우선, 하절기에 발생하는 악취에 대비하여 클린하우스 내 음식물통에 미생물을 투입하고, 휴일에도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척하고 있다.

그리고 노약자, 어린이들이 쓰레기 배출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종량제 분리수거함 뚜껑이 무겁다'라는 의견이 35%를 차지함에 따라, 종량제 봉투 10~20ℓ를 손쉽게 투입할 수 있는 2중 뚜껑이 달린 분리수거함을 제작 · 보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환경친화적 모범 서비스인 클린하우스 시설에 대한 전산화 관리를 통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첨단 IT서비스를 접목한 다양한 관리 · 운영지원 및 주민참여형 서비스 도입을 통하여 이용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인 클린하우스가 청정제주를 앞당기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강경엽
제주시 생활환경과 클린하우스담당
kykang@jeju.go.kr

일본의 청년창업 정책

창업자의 적극적인 도전은 끊임없는 신진대사를 가져와 다수의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창업률이 폐업률을 하회하고, 특히 젊은 층의 낮은 도전정신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1990년대 후반부터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강화함과 아울러, 대학발 벤처 지원, 엔젤투자제도 개선 등을 통해 청년창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강화함과 더불어 대학발 벤처 지원, 엔젤투자제도 개선 등을 통해 청년창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과정 운영

일본은 기업가마인드 함양과 관련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보급시킬 목적으로 1999년부터 중 · 고등학교 수업에 체험 · 참가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그 성공사례를 해당 자치단체 및 전국으로 확산시켜 학생들에게 장래 창업을 포함한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흥미를 갖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시하고, 이를 위해 학생들이 직접 참가하고 체험하며, 학교 교육과정에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본 정부는 지식 · 기술집약적인 창업자를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대학 · 대학원에서의 창업교육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2009년에 '대학 · 대학원기업가교육추진네트워크'를 설립하였다. 동 기구는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대학교수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업경험을 차세대에 전수하고자 하는 기업가, 창업 관련 외부 강사 등을 네트워크화하여 특히 지역에서의 기업가마인드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대학발 벤처창업 지원

지식과 혁신의 창출 거점인 대학은 기업가를 양성하는 교육의 역할과 함께, 대학의 지식 · 기술을 실용화 · 사업화함으로써 사회에 환원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일본의 대학은 지역 차원의 연구개발 활동에 있어 센터로서의 역할과 함께 산학협력 및 신산업창출을 위한 중추 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대학발 벤처의 유형은 IPO[1]를 지향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에서 일정 수

익을 올리고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공헌하는 성장지향형 등 다양하다. 그렇지만 대학발 벤처는 창업 이후 제품화 과정에서 인력 확보, 자금 조달, 판로 개척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일본은 해당 대학 출신 경영자 등을 활용한 경영자문, 대학에서 기업으로의 인재교류와 그 인재의 연구 성과에 기인한 사업화 등 대학의 자원을 활용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대학발 벤처가 목표로 하는 시장은 대부분 '새롭게 창출되는 시장'이지만 실제로 신시장 창출이나 판로 개척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일본의 대학은 벤처기업 제품에 대한 고객이나 시장의 평가를 높여주기 위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대학발 벤처기업에게 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내실있는 자금지원

일본 정부는 청년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정책금융공사를 통해 저금리의 정책자금을 융자하고 있으며, 창업 예비자 및 창업 5년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무담보 신용보증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과정에서 엔젤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엔젤투자제도를 개선하여 운용하고 있다. 즉, 창업 이후 3년 이내의 창업기업에 엔젤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시점에서는 (출자액-2,000엔) 상당의 금액을 소득공제하며, 소득공제 상한액은 총소득액의 40% 또는 1,000만엔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

일본의 청년창업 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단계별로 차등화된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 대학·대학원에서의 기업가정신 커리큘럼 및 교재를 교육단계별로 연계성을 갖도록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육 담당자의 확보 및 훌륭한 교육방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우수한 강사가 부족하다. 특히 지역에서 창업 강좌를 담당할 우수 강사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일본과 같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 강좌를 담당하는 강사 등에 대한 DB 구축뿐만 아니라, 이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질 좋은 강의가 지역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년창업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는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시·도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청년창업 전용자금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과 함께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엔젤펀드를 조성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현재 엔젤투자금액의 20% 또는 종합소득금액의 30%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방식에서 향후에는 일본과 같이 엔젤투자금액의 일정액(예: 상한 3,000만원) 또는 총소득금액의 40%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도 '벤처기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일본과 같이 창업 3년 이내 창업기업(필요할 경우 기술·지식집약형 청년창업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대학 차원의 판로개척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년창업기업들은 우수한 지식·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하더라도 기업경영 경험뿐만 아니라 사회경험이 일천하여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학 등에서의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기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과 같이 해당 대학의 동문 기업가를 활용한 경영지원과 함께 대학 차원에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 명칭사용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1) Initial Public Offering 주식공개나 기업공개를 의미함

양현봉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hbyangkiet@hanmail.net

EU의 지역고용협약제도
(Territorial Employment Pact)

지역고용협약(Territorial Employment Pact)이란 지역수준에서 지역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역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결성한 공식적인 지역파트너십이다. 지역고용협약의 주된 임무는 지역의 다양한 참여주체와 그들의 관심사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러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 · 실행하는 것이다.

EU 지역고용 협약의 도입 배경

지역고용협약(TEP, Territorial Employment Pact)이란 지역수준에서 실업문제 해결과 일자리 유지 · 창출 등 지역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고용정책과 여타 정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고 다양한 지역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결성한 공식적인 지역파트너십(regional partnership)이다. 지역고용협약은 1996년 유럽정상회의에서 EU 회원국의 지역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도입되었고, 2000년부터는 EU의 '성장과 일자리 동시추구 전략' 하에서 핵심적인 지역정책수단인 구조기금(Structural Funds)에 통합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EU 경제가 산업구조 변화와 더불어 저성장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성장과 고용창출의 문제가 더 이상 개별주체들의 행위나 소수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노력만으로 해소되기 어렵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 차원의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 · 실행하여 지역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역고용협약은 사실 새로운 개념의 정책이라기보다는 1990년대에 걸쳐 이탈리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등 EU 회원국에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파트너십에 기초한 상향식(bottom-up) 정책접근이 확산되고 일정한 성과를 실현하였던 시대적 흐름을 수용 · 반영하면서 이를 체계화한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EU 지역고용협약의 주요 내용

지역고용협약의 주된 임무는 지역의 다양한 참여주체와 그들의 관심사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러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 · 실행하는 것이다. 지역고용협약은 지역 수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보유자원 활용 · 배분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 특정 목표집단에 대한 지원, 기존 일자리 유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생활공간의 지속가능성 유지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지역고용협약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지역정책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 즉, 다양한 참여주체들을 공식적인 파트너십의 형태로 모으고 다양한 정책영역들을 결합함으로써 지역의 상황, 요구 및 기회에

보다 적합한 정책수단을 설계 · 실행하고, 지역과 중앙의 정책결정자 사이의 수직적 소통 · 교류를 개선하며, 모범사례들을 검증하고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지역고용협약 사례의 성공요인들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한다.

지역고용협약에는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 구체적으로는 중앙 및 지방정부, 구조기금 모니터링 조직, 기업과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 상공회의소 등 기업단체, 노동조합, 대상지역의 개발을 위한 조직, 비영리단체 및 커뮤니티그룹, 직업별 이익단체, 교육훈련기관, R&D조직 등 대부분의 지역주체들이 참여한다. 지역의 참여주체들은 상호 협의과정을 거쳐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동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각자가 보유하는 각종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연계 · 활용하는 방안들을 모색 · 실천한다.

지역주체들은 지역고용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 · 협의를 거쳐 지역고용협약을 작성하고 이를 EU 집행위원회에 제안한다. 지역고용협약은 전략문서(strategic document)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데, 주요 목표 및 계량화된 기대효과, 관할 공간범위, 참여주체, 대상집단 및 대상산업분야 설정, 실천방안 및 세부사업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제안한 지역고용협약을 선정함에 있어서 일종의 평가기준으로 지역고용협약의 운용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지역고용협약은 상향식 접근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역의 요구와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의 가용한 자원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상급조직의 지시가 아니라 다양한 지역주체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방식으로 지역고용협약을 마련하는 상향식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폭넓고 활동적인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이는 지역고용협약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지역의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폭넓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지역고용협약의 기획 · 실행에 참여하고 관련 재원의 조달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통합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지역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노동력의 수요 및 공급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혁신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EU 구조기금의 지원을 받는 지역고용협약의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보통 실업률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지만 숙련인력 부족 등에 따른 인력난 등도 고려된다. 실제로 선정된 지역고용협약 가운데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 많지만, 실업률은 낮으나 숙련인력 부족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역(오스트리아 등)도 적지 않다. 개별 지역고용협약이 관할하는 공간단위는 개념적으로 사회경제적 특성을 공유하는 지역, 도시, 고용권역으로 현실의 공간범위는 지방정부 관할지역, 대규모 지역, 산업지구 등 다양하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총 17개의 지역고용협약이 2000~2006년 구조기금으로부터 지원받으며, 수준이 상이한 공간범위의 지역고용협약들이 9개 연방주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2000~2006년 구조기금 기간 동안 2000년 7개였던 지역고용협약이 2006년 17개로 증가하였고, 지역고용협약의 공간범위도 점차 작아지는 경향도 발견된다. 개별 지역고용협약은 자율적으로 운영되지만, 연방 경제노동성(BMWA)과 위탁계약을 맺는 전국적인 조정기구를 통해 파트너십 지원, 교육훈련, 지역고용협약 간의 정보교류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조정기구에 의해 유지되는 TEP-네트워크는 국가내 지역고용협약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중요한 이해관계 당사자들까지 함께 묶는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발전에 미친 영향

지역고용협약은 노동시장정책의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체들 사이에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조정하는 데 주된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지역고용협약의 성격으로 인해 양적인 지표에 기초한 성과 평가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나 이탈리아 등 지역고용협약 사례 평가에서 보듯이 지역고용협약은 중앙 및 지역의 정책결정자 간의 조정 성과 개선, 지역주체 사이에 지역노동시장 문제에 대한 공통의 이해 형성, 이에 따라 정책의 최종수혜자에 대한 정책수단의 전달 성과 측면에서 양적 · 질적 개선

등 지역발전과 지역고용문제 해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지역고용협약은 정보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증대시켜 참여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정책수단의 성과를 높이고, 혁신적인 모범지역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수단의 보급 · 확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역고용협약의 가장 중요한 성공적 측면은 지역 내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유연한 제도적 틀의 역량을 강화시켜 왔다는 점이다. 점차 많은 지역주체들이 동기부여를 통해 지역고용협약에 참여하고 또한 지역주체간의 상호교류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은 실업이나 일자리창출 등 지역노동시장 문제 해소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이전에는 관심이 낮았던 제도적 접근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EU 지역고용협약의 경험은 지역고용협약이 일회성의 혁신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의식적으로 진화시켜야 하는 제도로서 이해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지역고용협약이 일반적인 국가전략의 한 요소로 위상을 갖게 되면서 지역 수준의 상향식 접근만으로는 불충분하게 되고, 따라서 다양한 지역고용협약 간의 교류 확대,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시행되는 관련 정책수단들의 조정을 가능케 하는 하향식(Top-down) 접근에 의해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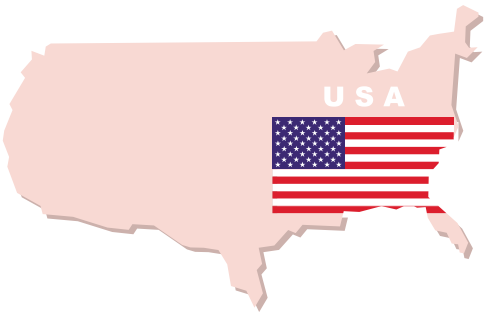
우리의 경우 고용문제가 지역발전의 중요한 측면이라는 인식에 따라 노동계 · 산업계 ·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공식적인 파트너십으로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전국 및 지역 수준에서 조직되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역주체간의 협의구조에 바탕을 두는 파트너십이지만, 내용적으로는 EU 지역고용협약처럼 공동프로그램 운영이 제한적이고 실질적인 조정권한도 취약하다. 지역 수준에서 일자리창출사업들은 여전히 중앙부처별로 연계성 없이 분산적으로 수행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수준에서 지역고용협약과 같은 실질적인 파트너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파트너십에 대해 구조기금과 같은 재원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의 경우 지역 내에서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사업들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협의 · 조정하는 기제 작동에 필요한 문화적 ·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다. 일부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기업, 대학, 고용센터 등과 연계하면서 일자리창출사업들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취업상담 · 알선, 교육훈련, 취업, 사후관리 등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모색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역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고용협약과 같은 공식화된 파트너십을 도입하기에 앞서 지역의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지역노동시장 문제에 대해 상호 교류 · 협의하고 각자의 역할분담을 인식하는 토양을 축적해 나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의 경우 지역에서 수행하는 대부분 일자리창출사업이 중앙정부의 세부지침에 따라 추진되어 사업 수행에 있어서 지역의 자율성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지역 수준의 일자리창출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지침을 완화하여 사업의 기획 · 추진에서 지역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지역주체들에게 책임성을 부과하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윤윤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yy27@kli.re.kr

미국 미시간주의 고용정책



미시간주는 약 20억 달러 규모의 '21세기 고용기금'을 설립했다. 동 기금은 미시간주 기업의 기술사업화, 투자촉진 및 고용창출 등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창업 및 고용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미시간주 산업 개관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의하면 자동차 산업 중심지인 미시간주의 공장 근로자 수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년간 미국에서 가장 많은 2만 9,800명이나 증가하였다고 미국 노동통계국을 인용해 보도했다[1]. 이는 같은 기간 미국 전체 제조업 일자리 창출 규모의 15%를 차지하는 수치다.

현재 미시간주는 기존의 첨단 자동차 및 관련 신소재와 생명공학에 대체에너지, 보안장비 등을 추가하여 4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미시간주가 4대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3대 엔진은 첨단기업의 인프라 구축과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21세기 고용기금, 기업지원기관으로서의 SPARK, 혁신클러스터로서의 SmartZone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기금의 설립

미시간주는 미시간개발공사를 통해 약 20억 달러 규모의 '21세기 고용기금' (21st Century Jobs Fund)을 설립했다. 동 기금의 설립 목적은 미시간주의 사업화 및 고용창출 잠재력 향상, 투자촉진, 외부 자금원과의 매칭펀드를 통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동 기금을 통해 추진된 '우수 에너지센터 사업화 지원사업'은 대학과 국립연구소로 하여금 에너지 관련 기업이 갖고 있는 지식재산을 공개하도록 지원하여 미시간주의 고용창출 및 에너지산업 공급체인을 발전시키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선택 미시간기금' (Choose Michigan Fund)은 신산업분야에서 대기업을 미시간주로 유치하기 위해 설립된 기금이다. 그 외에도 후술하는 공공 기업지원기관인 SPARK 내의 'Michigan Works!' 라는 연방지원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통해 2009년 현재 종업원당 1만 달러의 고용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SPARK 등 기업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수행되고 있다.

1) 한국경제신문 2011년 5월 3일자.

▶ 미시간주의 '21세기 고용기금'의 구성 및 예산(2010년)

단위 : 백만 달러

프로그램 및 형태	미시간주 예산투입(A)	민간 및 연방정부 매칭(B)	레버리지 비율(B/A)	총예산(A+B)
사업화를 위한 대출금	89.9	283.1	3.7	373.0
사업화를 위한 보조금	64.9	201.7	3.6	266.6
사업화를 위한 창업전 종자기금	14.8	34.2	2.6	49.0
신기술기금	4.2	17.7	9.1	21.9
투자기금	104.0	257.4	7.3	361.4
중소기업 대출사업	3.5	80.3	26.8	83.8
산업구조 다양화기금	13.4	47.2	7.0	60.6
우수 에너지센터 사업화지원사업	42.9	360.0	8.4	402.9
선택 미시간기금	9.0	270.0	30.0	279.0
총계	346.6	1,551.6	4.5	1,898.2

자료 : Pollina Corporate Real Estate, Inc., MICHIGAN GENERATING JOBS & TAX REVENUE, Dec. 2010, p.6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 및 세제

미시간 주의 산업발전을 위해 설립된 미시간경제개발공사(MEDC)는 창업준비단계의 창업가를 위해 '미시간 창업전 종자펀드'와 '미시간 소규모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미시간 창업전 종자펀드'는 기업설립 초기 단계에서 사업화에 근접한 첨단 창업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발전을 촉진시킨다. 이 펀드는 투자파트너의 매칭 정도에 따라 기업당 5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정도가 투자되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2007년 현재 미시간주는 주 내에 있는 기업의 약 70% 정도가 세금감면 대상이고, 기업의 법인세율도 4.95%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특히 연간 총수입이 35만 달러 이내인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과세도 하지 않기 때문에, 창업 초기의 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미시간주는 창업기업 공제, R&D투자 공제, 생산시설 투자 세액공제, 고용창출에 따른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창업 초기의 기업은 지역 내 투자액의 25%를 보조금 형태로 되돌려 받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비수도권의 제조업 창업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10~15%(15억원 한도)를 지자체와 매칭으로 2회 분할 지급하는 '창업 투자보조금' 제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고용 성과

MLSC와 MTTC사업에 '21세기 고용기금'까지 합할 경우, 지역사업 추진 및 기금설립부터 현재까지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고용규모는 2만 4천여명에 달한다. 대표적인 고용 창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미시간주와 미시간대가 주도한 '미시간 생명과학 회랑 사업'을 통해 투자규모가 2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화이저 연구공장을 앤아버로 유치하였다. 또한 화이저가 2007년 앤아버지역의 일부 공장을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하자, 미시간대는 SPARK와 협력하여 2010년까지 유능한 해고 근로자 88명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21세기 고용기금'을 통해 화이저 연구인력으로 하여금 미시간대에서 연구를 통한 창업을 지원하였다.

'21세기 고용기금'을 활용한 기업으로부터 많은 성공사례가 도출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NeuroNexus Technologies사이다. 동사는 미시간대학으로부터 파생된 뇌신경 관련 기기를 생산하는 창업기업으로 동 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성과의 사업화에 성공했으며, 2008년에는 필립스전자와 다년간에 걸친 연구협정을 체결했다. 그 외에도 동 기금을 통해 리튬전지를 생산하는 세계적인 기업인 A123 Systems를 유치하여 기업 상장을 통해 약 4억 달러 가까이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억 5천만 달러의 연방예산의 매칭이 이루어졌다. 이런 예산 지원을 통해 미시간주 리보니아에서 생산시설을 확

장할 수 있었고, 350명 정도의 지역 내 고용을 창출하였다.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2]에서 수행한 기업설문조사에서는 자금조달이 창업시 도움이 될 요인(32.0%)인 동시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다. 또한 지방 기업들은 고용증대를 위해 인력구득의 용이성(39.3%)과 함께, 법인세 인하(18.6%) 및 저금리 융자 가능 기금 운용(18.0%)을 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나라도 미시간주의 '21세기 고용기금'과 유사한 광역경제권 차원의 창업 및 고용지원을 위한 기금운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기금의 설립을 통해 창업초기의 기업뿐 아니라, 창업 준비단계에 있는 기업까지도 지원함으로써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미시간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 내 기업의 약 70% 정도가 세금감면 대상이고 기업의 법인세율도 4.95%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특히 미시간주는 기업의 연간 총수입이 35만 달러 이내인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과세도 하지 않기 때문에 창업 초기의 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이상은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로 법인세가 설정되어 있다. 법인세 인하가 창업 및 고용촉진효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세금감면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디트로이트 GM본사 근처

▶ 미시간경제개발공사

▶ 미시간대

2) 김정홍, 『가젤지역의 고용창출 결정요인 분석』, 2012. 3(예정)

김정홍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
kimjh@kiet.re.kr

역주민 스스로 지역 관광 발전을 추구하는 지역 가꾸기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섬지역 마을기업과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을 위해 연구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섬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섬의 매력과 자원을 발굴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만들어 주민 스스로 제공하는 개발방식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2011년 섬여행학교에서는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남도 섬명소화사업'을 추진하여 총 8곳(2월-봄맞이 완도 청산도 기행, 4월- 장애인과 떠나는 신안 임자도 섬여행, 5월-여수 금오도 비렁길 트래킹 스쿨, 6월-목포 사랑의 섬 외달도 여행, 7월-강진군 가우도여행, 8월-윤선도를 만나는 완도군 노화도와 보길도여행, 9월-초분의 전설을 찾아 떠나는 영광군 송이도여행, 10월-신안군 슬로시티 증도와 병풍도여행, 12월-자동차로 떠나는 섬여행, 고흥군 거금도)의 섬지역에 3,000여명의 여행객이 찾아오는 성과를 이뤘으며, 파워블로그와 언론에 해당 섬 여행정보가 게재되어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거두었다. 금년에도 15개 섬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 마케팅 이벤트와 섬여행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섬여행은 회를 먹고 유람선을 타고 휙 둘러보는 '먹고 마시는 여행'이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여행, 즐겁게 배우는 여행, 지역에 도움이 되는 여행'을 지향해야 한다. 섬여행학교는 앞으로도 섬의 독특한 생태와 문화를 온 몸으로 체험하는 여행, 아름다운 섬 길을 걸으며 바다와 사람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느끼는 섬여행 트렌드를 만들어가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섬여행학교 홈페이지 www.ecostep.co.kr
섬여행학교 대표 연락처 : 062-530-4087

강신겸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tourlab@chonnam.ac.kr

공동체박물관 계남정미소의 역할과 꿈

며칠 전 모 디자인잡지 기자와 사진작가가 취재차 다녀갔다. 그들은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그날따라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한다. 고생하면서 이런 시골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어떻게 이런 곳이 널리 이름을 알리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왔다고 한다. 그런 의문은 처음 내가 공동체박물관 계남정미소를 만들 때 고민하던 문제였다. 그만큼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음은 물론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심지어 때로는 본인 스스로)과 맞서 이겨나가야 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녀가 있다. 학교에서 '정미소'란 무엇을 하는 곳이냐는 질문에 선뜻 손을 들고 '박물관'이라고 했더니 선생님과 아이들이 모두 웃어 창피했다고 한다. 우리 지역 우편집배원 아저씨가 계남정미소의 변모를 처음 알아차리고 '생각의 전환이 놀랍다'고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이야기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박물관·미술관이 400여개가 된다고 한다. 계남정미소는 등록된 박물관도 아니며 규모도 작고 산골오지에 자리 잡고 있다. 훌륭한 미술관·박물관들을 놔두고 이런 시골 벽지까지 찾아오는 이들에게 계남정미소는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를 늘 고민한다. 그것은 그들과 차별화되는 또 다른 삶의 질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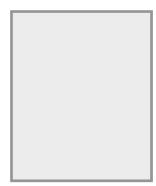
2005년에 낯선 곳에 있는 폐정미소를 사서 고칠 때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말이 쉽지 낯선 이방인이 지역주민들과 섞이며 사는 방법부터 배워야했다. 처음에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는 짓거리로 오해도 받았다. 그들이 볼 때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은 본인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지난 6년 동안 한 해에 네다섯 차례 기획전을 열면서 꾸준히 지역주민을 찾아다니고 그들의 이야기, 전통, 생활을 문화로 엮어내면서 이것은 일회적인 이벤트나 가시적인 문화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 금년에 기획하는 지역에 생존하는 한국참전용사들의 기념전을 위해서 자료를 구하고 사진을 찍으러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객지에 와서 고생한다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수입도 없는 일에 그렇게 애쓰고 다닌다고 걱정을 하는 어르신들이 늘었다. 사실 이러한 반응을 얻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이제 겨우 이들의 반응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계남정미소는 오히려 외부적인 호응에서부터 시작한 경우였다. 일찍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던 것을 작게나마 지속적으로 실행한다는 사실이 전문가들의 눈에 띄게 되고 입소문을 탔다.

최근 들어 계남정미소는 각 지역의 주민 대표 및 문화 관련자들이 단체로 방문하는 횟수가 많아졌다. 여기서 소외지역 문화 활동의 가능성 및 지침을 얻어간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한 젊은 작가가 물었다 "이런 일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창의력도 있고 힘도 있으니 하기가 쉽겠지만 평범한 시민이라면 가정을 꾸리기 위해 일했으며 돈을 벌어야 산다. 나는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하고 노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가족의 양해 하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좋은 목적이라고 해도 개인의 희생만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지속적인

Êy >Þ¿l HzÞî ·8 MIÞ× 2 K\
D ~ØI S5v œÑ ‹wÕ{× D|(SÑE
*x5ý ƒ•ñI SŠ WÝ ÉÝ8 ÊCÞt 5È
á û S× 2Ñ3 :× L7 Ò; Ñ ‹î
à PKI r Wð LÀ ¬7 ~—> ù:Ñ ‹(
þ I•× IÞà L8 PPKD ™•ý -D jl
‡äÄ ÑWSa ´>D •(x ™,I z*d Ù
Þî ñ àzD Ò (Ñ É8 û ¹× *I ‰
ðî
a× R™rØ™À(\ áp û S8é s Þ× Š

¹— œ7 25ý •2SÅ›™ ...i•·×> I
ÑÉÀ² “‡iÝ3 ÄÄ× Ï ŽIÀ² Ba8
{×î ○



ã Ñ Ë
...i•·× ´
TBMUCPY !IBONBJM OFU

▶ 전라북도 축산업 GRDP

단위 : 억 원

구 분	전 국			전 북				
	GRDP(A)	농림어업 분야(B)	비 율 (B/A)	GRDP(a)	농림어업 분야(b)	축산업 분야(c)	비 율 (b/a)	비 율 (c/b)
2000	6,037,331	256,530	4.2%	192,986	24,755	2,069	12.%	8.4%
2005	8,693,046	256,488	3.0%	252,212	25,598	4,416	10.1%	17.3%
2010	11,752,012	264,815	2.3%	345,469	26,322	5,764	7.6%	21.9%
증감률	35.2%	3.2%	–	37.0%	2.8%	30.5%	–	–

자료: 통계청

가 폐업할 것인지, 폐업 후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FTA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의 경쟁력강화와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다. 지난 10년간 축산은 타 분야에 비해 2배 이상 성장하였다. 전라북도의 경우도 전라북도 농림어업 GRDP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8.4%에서 2010년에는 21.9%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 같은 성장은 축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었지만, 이로 인해 FTA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분야가 되었으며, 농촌 환경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적정 사육두수를 고려한 축산분야 구조조정 및 친환경축산을 중심으로 한 경쟁력 강화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원예작물을 수출농업으로 적극 육성하는 전략이다. FTA로 인해 성장한계에 부딪힌 축산분야를 대체할 수 있는 분야로 시설원예를 설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3대 보완대책은 FTA 추진에 따른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대안적 지역농업을 육성하는 전략이다. 첫째, 전라북도 로컬푸드 체계 구축이다. 학교급식, 농민시장, 꾸러미밥상 등 지역농산물 생산·유통에 대한 사업발굴 및 사업추진 체계화를 위해 '로컬푸드 기본계획'을 삶의 질 정책과 협력하여 수립하고 있다.

둘째, 농촌창업, 농가민박·펜션, 마을기업 등 농업 외 농가소득 확보를 위한 농가경제 다각화 지원대책이다. 현재 전라북도의 경우,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40% 이하로 떨어졌으며, 농가소득 하위 20%의 경우는 농업소득이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농업 외 분야에서의 소득확보가 FTA로 인해 갈수록 작목선정이 어려운 중소농가 생활안정을 위한 핵심대책이 될 필요가 있다.

셋째, 시군별 농가별 맞춤전략을 도출하는 것이다. 전라북도는 현재 7개 시군에서 농가단위 소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이를 전체 시군으로 확대하고, 전라북도 차원의 통합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품목별 농가별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 별로 적절한 정책대안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차원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강화와 더불어 중앙과 지역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지역이 좀 더 자율성을 갖고 지역 FTA 대응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포괄보조 사업의 경우 명목상으로는 지역이 자율성을 가지는 재정사업이지만, 엄격한 운영지침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중앙의 통제에 좌우되고 있다. 우선 포괄보조 사업이라도 지역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완화하고, 이와 함께 FTA 대응 재정투자도 지역의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지역 자율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민수
전북발전연구원 농업농촌팀 연구위원
minsoo.lee@gmail.com

균형발전 선도지역 충북의 과제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시간이 경과될수록 지역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의 경우에도 청주권(충북도 면적의 13.0%)과 타 시 · 군간 격차가 심화되어 지역간 불균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청북도 전체인구의 51.5%, 제조업의 35.2%가 청주권에 집중되는 데 반해, 남부권과 북부권은 저발전 문제가 중요한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의 타개를 위해 2012년 2월 7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는 민선 5기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추진되었던 '충북 비전 2014' 선포 1주년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미래발전의 기회요인들을 분야별로 착실히 발전시켜 '충북 미래' 100년의 번영을 담보하는 융성시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선포식 이후, 1년간의 추진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이었다. 그동안 충북도는 생명과 태양산업의 집중육성과 부문 · 계층 · 산업간 균형발전 실현을 도정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3 + 1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3 + 1 프로젝트는 바이오밸리와 솔라밸리를 집중 육성하면서 청주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와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전략이다.

제시된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KTX 오송역이 개통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의료 6개 국책기관이 들어선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바이오밸리로 육성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바이오 연구타운으로, KTX 역세권은 바이오 문화 · 관광권으로, 오송 1단지는 바이오 행정 · 산업지구로, 오송2단지는 바이오 교육 · 산업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태양광 셀 · 모듈 생산량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청주와 증평 · 청원 등 7개 시 · 군을 포함한 중부권을 '태양광 특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그리고 청주공항의 신규 국제노선 확대(4개→6개), 활주로 연장(3600m), 추가 진입로 개설(900m), 화물청사 증축(1만 8000㎡), 수도권 전철 공항 연장, 공항이용객의 편의시설 확충 등 경쟁력 강화와 항공정비(MRO) 산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포된 비전의 공유 확산과 지역간 균형발전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제1, 2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건설, 남부권과 북부권 균형발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충북 비전 선포와 함께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12~2016)이 매년 300억원, 5년간 총 1,500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선 4기부터 시작된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07년에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정과 이를 근거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내 낙후지역에 대한 전략 · 공모사업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지역발전사업을 선정 · 지원해 오고 있으며 전국 균형발전 선도지역으로 이름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06~2011)을 거치면서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도 노출되어 왔다. 백화점식 사업선정으로 인해 가이드라인 제정과 지역발전 성과 도출의 어려움을 겪었고, 사업내용은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했다. 또한, 사업진행 및 결과에 대한 평가체계의 부족과 함께 컨설팅기능 미흡과 홍보 부족으로 인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이번 2단계 사업에서는 지역발전 성과도출을 위한 균형발

전 모델을 제시하고, 예산증액을 통해 집중투자를 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선정과 결과에 있어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며 컨설팅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균형발전이란 사실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개념이지만 불균형 완화를 통한 지역격차 해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핵심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충북도의 지역균형발전정책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전국 균형발전 선도지역으로서 발 빠르게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성과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균형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방향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한다면 첫째,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권 · 북부권에 대한 발전전략과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민선5기의 충북비전에서와 같이 청주권 중심의 발전전략이 주를 이루고 있어 남부권 · 북부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높은 발전역량을 가진 청주권의 파급효과를 타 권역으로 공유 확산한다는 방안은 좋으나 성장동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타 권역간의 공유 확산은 쉽지 않을 것이기에 기본적인 성장동력 향상을 위한 발전전략과 지원대책이 같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조기 건설이다. 이 도로는 충북 비전 2014 선포식에서도 제시된 사업으로 균형발전의 전제조건은 먼저 인적 · 물적 교류의 확대에 있다. 그러나 현재 충북은 남북간 단절로 인해 권역간 교류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같은 도민이라는 동질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충청내륙고속화도로(단양~청주~영동)의 조기 건설이 해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단절된 지역간 도민소통과 동질성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전제요건인 것만은 확실하다.

셋째, 현재 추진 중인 충북경제자유지역에 충주지역 포함을 통한 지정이다. 충북경제자유지역은 청주 · 청원과 증평 5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자유지역으로 청주권과 중부권 중심의 계획에서 나아가 충주지역 포함을 통해 그 파급효과를 북부권역까지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관광과 레저지구 보완이

▶ 괴산 장류식품공장 전경

▶ 도라지 마을 증평 율리마을 전경

필요한 상황에서 충주의 에코폴리스(관광, 물류,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연계된다면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균형발전은 단기간에 이룩하기 어렵고 그 성과를 측정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지역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동질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충북에서 그동안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 추진할 균형발전정책들은 충북균형발전을 위한 기틀이 될 것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좀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성과를 위한 단기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한번 더 고민하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khweon@cri.re.kr

천혜의 행복공간 대청호 오백리길

대충청권 녹색생태관광사업은 지난 2010년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대청호의 청정자연자원을 활용해 대충청권의 새로운 녹색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대청호를 둘러싼 대전과 충북, 충남에 이르는 약 220km(500리) 대청호오백리길을 21개의 탐방코스로 조성하는 관광사업이 2013년 4월까지 3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대충청 녹색생태관광사업은 현재 '사람과 산과 물이 만나는 대한민국 대표 녹색생태관광지 조성'이라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녹색성장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대청호 주변 광역단체인 대전, 충남·북에서 수립한 개발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상생 협력할 수 있는 허브계획으로 활용하고, 대전의 대덕·동구, 충북의 옥천·보은·청원 등 5개 지방자치단체의 생태탐방로를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관광거점을 형성하며, 해당권역의 지역마케팅 및 홍보, 스토리텔링, BI 매뉴얼 등을 공동으로 시행해 통합적인 지역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있다.

1차년도 주력 사업으로는 대청호 주변의 다양한 자연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21개 코스, 18개 거점지역을 지정하는 신규 산책등산로 개발, 대국민홍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대청호오백리길'이라는 국민 브랜드를 탄생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추진 중인 2차년도 사업에서는 대충청권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녹색산업의 원동력을 확보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녹색관광 활성화, 지역사회 발전, 자연생태의 보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대청호를 중심으로 한 대전·충청권 녹색관광자원은 거점지역 주변과 전 국민에게 친환경 휴식레저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기반으로서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국책사업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고부가치형 산업자원이다.

대충청권 녹색생태관광사업을 수행하면서 얻은 교훈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협조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참여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청호오백리길은 소통의 공간이자 치유의 공간이다. 그 공간은 어느 누구든지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을 만끽하면서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축복의 공간이자, 대전 충청권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천혜의 선물이다.

▶ 박세리 대청호오백리길 홍보대사 위촉식

문경원
대전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moonkw@djdi.re.kr

중국 시안(西安)의 대당서시(大唐西市) 프로젝트

중국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시안시(西安市)는 섬서성(陝西省) 제1의 도시로서 인구가 약 850만명, 면적은 10,108㎢(서울시 면적의 17배)로서 중국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부대개발 정책의 거점도시이다. 또한 시안시는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 중국에서 세 번째로 국제화 대도시로 지정되었으며, 항공우주, IT 등 첨단산업의 집적도가 높아 중국경제의 성장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시안시는 이러한 국제화와 첨단 산업화 전략과 함께 과거 1,100년 동안 중국 13대 왕조의 수도로서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의 하나로 대당서시(大唐西市)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대당서시 프로젝트는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현재 시안)의 서시(西市) 유적지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과거 동양 최대의 국제교역 시장이자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었던 서시(西市)의 역사성을 현대적 관점에서 복원하는 사업이다[1]. 본 사업에 대해 시안시 정부는 황성복원계획(皇城復原計劃)의 일환으로 중시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2010년에 국가급 문화산업 시범기지(4A급)로 선정한 바 있다.

대당서시 프로젝트는 과거 장안의 서시를 테마로 실크로드 풍경거리, 국제골동품시장, 서시유물 박물관, 전통호텔, 쇼핑몰 등을 포함한 문화복합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실크로드와 관련이 있는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인도, 터키 등 12개 국가관으로 조성될 실크로드 풍경거리는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시안시는 지역의 브랜드가치 제고와 관광객 유

▶ 대당서시 전경사진

치 및 지역상권 활성화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안시는 대당서시 프로젝트와 함께 당나라의 거리를 재현한 대당불야성(大唐不夜城)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주도적 역할과 공공부문의 지원 속에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관광명소를 조성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복원하려는 대당서시 프로젝트를 국내 지자체들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당서시 실크로드 한국관을 국내 지자체의 관광축제, 특산품, 문화공연 등을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長安의 東市는 관리나 사절단 등 고위급을 대상으로 한 시장인 반면에, 西市는 서부유럽과 한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의 상인들이 활동하는 국제시장으로 개별 상점이 4만개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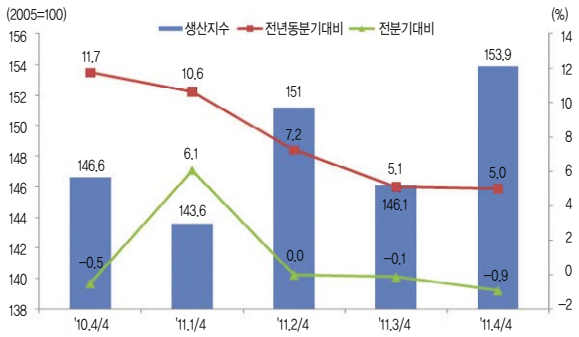
송우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swkyong@kiet.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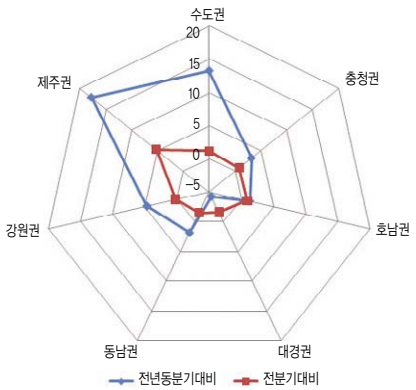
생산

2011년 4/4분기 광공업생산(생산활동)은 전기, 기계장비 등은 부진하였으나, 식료품,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음향통신, 자동차 등의 호조로 전년 동분기 대비 5.0% 증가하였다. 전년 동분기 대비 제주권(17.9%), 수도권(13.3%)의 호조세가 뚜렷한 반면, 대경권(–4.2%)은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 시도별로는 식료품,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음향통신, 자동차 등의 생산이 활발한 제주(17.9%), 경기(17.6%), 울산(11.5%) 지역에서 전년동분기대비 증가율이 큰 것으로 조사

〈분기별 생산지수 변화 및 광역경제권역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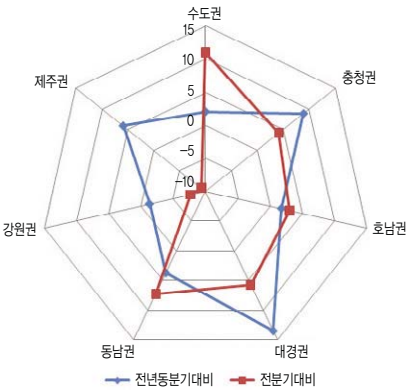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 · 제조업동향조사

소비

2011년 4/4분기 대형소매점 판매는 의복, 신발 및 가방 등 준내구재, 화장품 등 비내구재의 판매는 증가하였으나, 가전제품, 가구, 승용차 등 내구재의 판매가 감소하여 전년 동분기 대비 3.6% 증가, 전 분기(3.9%)에 이어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었다. 전년동분기대비 대경권(13.5%), 충청권(8.9%)의 호조세가 뚜렷한 반면, 강원권(–1.3%)은 감소, 호남권(1.7%), 수도권(2.0%) 등의 증가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백화점판매는 경기, 광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소폭 증가한 가운데, 대구(30.9%)는 큰 폭의 증가세 기록

〈분기별 소매판매액지수 변화 및 광역경제권역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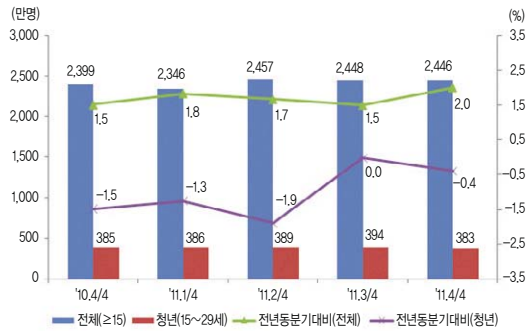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소매판매액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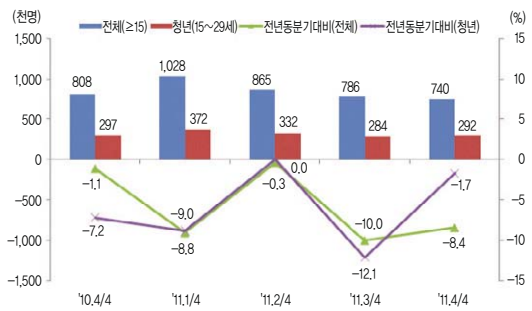
고용과 실업

취업자는 생산활동 호조에 힘입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청년층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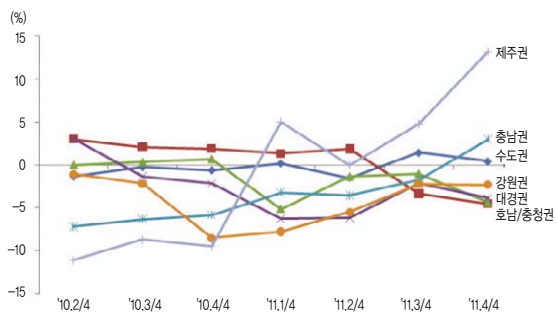
〈분기별 취업자수 변화 및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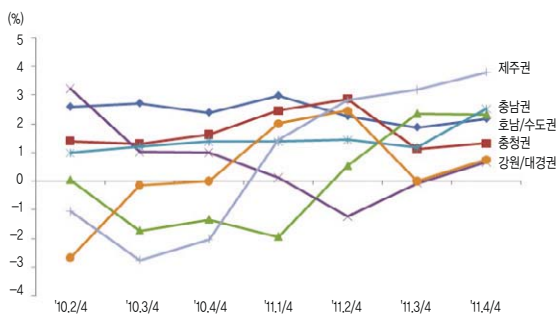
〈분기별 실업자수 변화 및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광역권별 취업자수의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율 변화〉



〈광역권별 청년 취업자수의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율 변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1년 4/4분기 취업자(2,446만명)는 사업 및 개인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에서는 증가하였으나, 계절적인 영향으로 농림어업이 크게 줄어 전분기 대비 0.1% 감소하였으며, 청년층(만15~29세) 취업자(383만명)는 전분기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년 동분기 대비 전체 취업자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청년층의 취업자수는 다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11.2/4(1.7%)→'11.3/4(1.5%)→'11.4/4(2.0%)
** '11.2/4(-1.9%)→'11.3/4(0.0%)→'11.4/4(-0.4%)

2011년 4/4분기 실업자(74만명)는 전분기(78.6만명) 대비 5.9% 감소하였으나, 청년층 실업자(29.2만명)는 전분기(28.4만명)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전년 동분기 대비 실업자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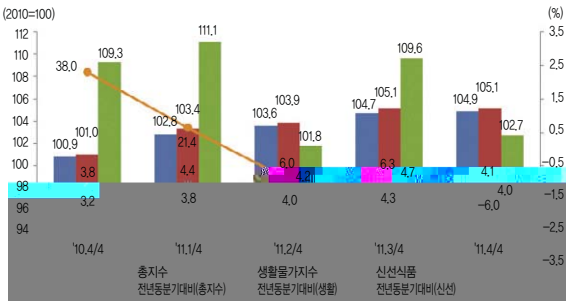
* '11.2/4(-0.3%)→'11.3/4(-10.0%)→'11.4/4(-8.4%)
** '11.2/4(0.0%)→'11.3/4(-12.1%)→'11.4/4(-1.7%)

수도권(1,231.5만명)은 도소매 · 음식숙박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취업자가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2.2% 증가하였으며, 청년층(220.5만명)은 0.4% 증가하였다. 충청권(245.8만명)은 제조업 등에서 취업자가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1.3% 증가한 반면, 청년층(35.8만명)은 4.5% 감소하였다. 호남권(241.0만명)은 농림어업 취업자가 줄고, 사업 및 개인서비스업 등의 취업자가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2.3% 증가하였으나, 청년층(28.2만명)은 감소세(-4.4%)가 유지되고 있다. 대경권(255.8만명)의 취업자수는 농림어업에서 줄고 제조업 등에서는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청년층(34.6만명)의 감소세(-3.9%)는 유지되고 있다. 동남권(374.4만명)은 도소매 · 음식숙박업 등에서 취업자가 늘어나 전년 동분기 대비 2.5% 증가하였으며, 청년층(51.7만명)은 3.0% 증가하였다. 강원권(67.9만명)은 전년 동분기 대비 0.7% 상승하였으나, 청년층(8.4만명)의 취업자수 감소세(-2.3%)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권(30만명)은 사업 및 개인서비스업 등의 취업자수 증가로 전년 동분기 대비 3.8% 증가하였으며, 청년층(4.3만명)의 증가세(13.2%)는 광역권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가

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한 지수로,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물가지수이다. 생활물가지수는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2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이다. 신선식품지수는 신선 어개 · 채소 · 과실 등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1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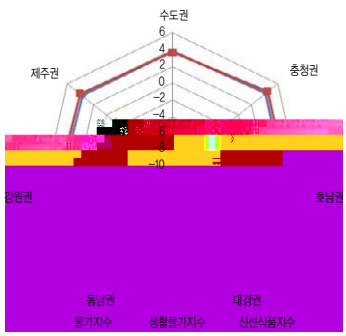
〈분기별 물가지수 변화 및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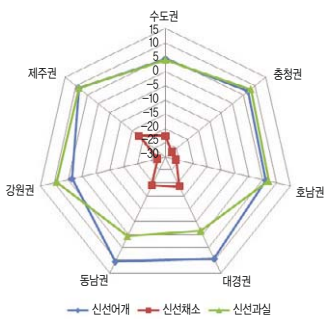


2011년 4/4분기 소비자물가지수(104.9)는 전년 동분기 대비 4.0%, 생활물가지수(105.1)는 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6.0% 감소하여, 전분기(6.3%)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선채소지수는 오이(20.9%), 고구마(19.5%) 등은 상승하였으나, 배추(-61.6%), 무(-61.1%), 파(-60.9%) 등이 크게 감소하여 22.4% 하락하였다. 전복(14.4%), 갈치(14.1%), 오징어(14.0%) 등이 상승한 신선어개지수(6.8%)와 밤(33.5%), 참외(16.8%) 등이 상승한 신선과실지수(4.1%)는 전년 동분기에 비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권/물가지수별 전년동분기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2011년 4/4분기 생활물가지수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광역권에서 소비자물가지수(총지수)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물가지수 증가율은 대경권과 동남권이 각각 4.6%로 높게 나타났다.

장바구니물가라고 불리우는 신선식품지수의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율은 전국적으로 하락세를 기록, 강원권(-8.7%), 수도권(-6.9%), 대경권(-6.6%)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선어개지수는 다소 상승하여 동남권(10.5%), 대경권(9.4%), 제주권(8.7%) 순으로 확인되었다. 신선채소지수 하락에 의한 신선식품지수의 하락은 지난해 동분기의 신선채소지수가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신선과실지수 증가율은 강원권(9.1%), 제주권(8.7%), 충청권(8.2%) 순으로 높고, 대경권(-1.5%)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경은
통계청 사무관
kelim@korea.kr

The Coming Jobs War

갤럽의 크리프턴 회장이 쓴 이 책은 현재를 "일자리 전쟁"(Jobs War)라고 한다. 지구상에 70억명의 인구가 있고, 그 가운데 30억명 정도가 공식적인 풀타임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8억 개 정도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것이 개인의 존엄과 가정의 행복을 저해하고, 사회적인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향후 30년의 지배적인 가치는 이전과 달리, 민주주의나 자유, 정치나 군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능력"이 될 것이며, 이점에서 중국이 가장 앞서 있다고 한다.

이 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언급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 '07년 600만개의 기업이 있는데 이 가운데 500명 이하 고용기업이 99%이고 10,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점보'(jumbo) 기업은 1,000개에 불과해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2010년 세계 GDP 가운데 미국이 25%, 중국이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2040년에는 중국이 35%, 미국이 15%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향후는 고전경제학적 접근보다는 소비자의 기호나 취향, 감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경제학적인 접근이 중요하며, 특히 소비자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소비자 감성경제(emotional economy of customer)'에 의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도시가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국의 경우 100대 도시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며, 2009년의 경우 미국 벤처 캐피털의 거의 절반을 뉴욕, 팔로 알토(Palo Alto), 시애틀, 서니빌(Sunhyvale)이 차지했다고 한다. 특히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의 문화 형성이 중요하며, 지역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네브라스카주 모마하(Omaha)의 워런 버핏과 같은 "현지 리더"가 일자리 창출에서 필수적이라고 한다.

일자리 창출에서는 혁신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낙관성'과 '결단성'을 가진 기업가(entrepreneur)가 중요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두뇌를 세계에서 불러 모을 수 있는 인적자원 유치 전략도 중요하다고 한다.

미국은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료가 연간 2,400조원에 달하는데, 이를 일자리 창출로 돌리기 위해서는 세금부과 보다는 개인의 브랜드에 중요한 국민행동 변화시책을 펼칠 것도 언급하고 있다. 모든 국가에서 비만 방지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 책은 일자리 전쟁에 대한 대응여부에 따라 국가와 지역의 사회적 후생과 행복이 달라지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자리 사정도 대졸자는 물론이거니와 기성세대, 여기에 더해 인구증가가 국가·지역의 활력이 되는 '인구 보너스'(population bonus) 시대를 지나,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경제발전, 지역활력을 저하시키는 '인구 오너스'(population onus) 시대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고령자의 일자리까지 걱정해야 하는 형편에 와 있다.

특히 '나' 한테 주어지는 '내 지역'의 일자리가 중요해지는 일자리 전쟁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국가는 물론이고 모든 지역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런 형편에서 이 책은 일자리 창출에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를 일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나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실장
hhkim@krila.re.kr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정책의 방향과 과제’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지식경제부 등과 공동으로 2월 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동남권(2/14), 호남권(2/16), 대경권(2/21), 강원권(2/23), 제주권(2/28) 등 각 권역별로 ‘일자리창출 중심의 지역정책의 방향과 과제’ 지역순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 순회세미나는 지역정책의 핵심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지역 일자리 문제에 대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 확대방안과 지역 간 일자리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 광역권별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민 체감형 일자리 창출 방안 제안

이번 순회세미나에서는 선도산업, 신지역특화산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등 지역산업 · 인재양성 정책의 변화에 따른 ‘지역일자리’ 창출효과 제고방안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대학과 기업의 교류활성화 등 기관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동 세미나는 총 3개의 주제로 나뉘어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1주제에서는 해당권역의 전문가들이 권역의 지역산업과 일자리 동향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2주제에서는 산업연구원의 권역담당 연구자들이 지역산업개편과 일자리 창출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2단계 선도전략산업 추진과 지역특화산업 개편방안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정책의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3주제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전문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현재와 같은 대학의 일방적 교육을 통한 공급자 중심의 교육체계로는 기업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형 대학 특성화를 위한 전문

◀ 홍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지역간 공생발전에 대한 기조강연

◀ 광역권 산업 및 일자리 동향에 대한 지역전문가의 발표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과 연계한 지역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

◀ 광역권 선도산업 2단계 사업과 연계한 지역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성 · 취업경쟁력 및 취업지원 체제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홍철 지역발전위원장은 이제 '지역정책'은 그 지역의 일자리를 늘려줄 수 있는 정책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정책'에 관한 지방의 역할로 지자체가 지역 인재와 기업의 매칭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금번 지역순회 세미나에는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정책관,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소장 등 중앙부처 관계자를 비롯하여 각 지역의 언론사, 지역대학, 상공회의소, 지역기업 청년 취업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한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세미나 발표 및 토론 내용을 중계하였으며, 트위터 상에 올라온 일반국민들의 질의내용에 대해 세미나 참석자들이 토론내용에 포함시켜 답변을 하는 등 SNS를 통한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독 | 자 | 광 | 장

계간지 '지역과 발전'은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지역공무원은 물론 지방의회, 연구원, 학계 등 지역발전에 관심있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지역발전 국내 · 외 사례**
현재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지역 발전 관련 국내 · 외 사례 소개

▶ **지역발전과 사람**
지역의 사업 사례 소개
현장의 담당자로부터 사업 진행의 어려움과 해결과정, 성공 노하우 등 조언 소개

▶ **기고**
칼럼형식의 지역의견 발언대

· 집필분량
원고지 10매(A4 2매), 표, 다이어그램, 사진 포함
·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접수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본관 303호

▶ **도시및지역계획연구원**
· 전화 : 02-538-3692 · 팩스 : 02-3453-2407 · 이메일 : kepsi2010@gmail.com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E-mail : kepsi2010@gmail.com)

· 이름, 나이, 성별
· 연락처, 주소, 이메일
· 직업
· '지역과 발전' 이번 호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글과 그 이유는?
· 다음 호에서 인터뷰했으면 하는 인물이나 다룰 소재를 추천해 주세요.
·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사항을 적어주세요.